2011년도 업무계획

2011년도 업 무 계 획

-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2010. 12. 27.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Ⅰ. 2010년 추진실적 평가 ····· 1

Ⅱ. 2011년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 9

Ⅲ. 주요 추진과제 ····· 15

1. 농어업 분야 위험관리 강화 ····· 17

(1) 가축질병 대응 강화 ····· 17

(2)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 19

(3)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 ····· 24

(4) 재해 등 위험관리 강화 ····· 28

(5)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 31

(6)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강화 ····· 35

2. 성장동력 확충 ····· 43

(1) 농식품 R&D 개편 ····· 43

(2)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45

(3) 국제곡물 가격상승 대응 및 해외 농림어업 개발 ····· 53

(4)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59

(5) 종자 · 생명산업 육성 ····· 63

(6) FTA / DDA 협상 대응 ····· 67

3. 농어촌 지역 활성화 ····· 71

(1) 인력육성 및 귀농 · 귀촌 활성화 ····· 71

(2) 농어촌 사회 안정 ····· 75

(3)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 79

(4)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81

(5)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 ····· 85

(6) 민간투자 활성화 ····· 86

(7) 협동조합 선진화 ····· 88

(8)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 91

Ⅰ. 2010년 추진실적 평가

1. 성 과

❑ **(농림어업 생산액)**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농림어업 생산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 농림어업 생산액 : ('05) 41.3조원 → ('07) 41.6 → ('08) 46.0 → ('09) 49.9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쇠고기 이력제 등 주요 정책이 **축산물, 과실류 등의 생산 증가**와 **농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

* 축산업 생산액 : ('05) 11.8조원 → ('07) 11.3 → ('08) 13.6 → ('09) 16.5

❑ **(농어가 경영안정)** 농어가 경영마인드 확산 및 재해보험 등 **소득·경영 안정장치 내실화**

○ 민·관 합동「비용절감 운동본부」설립, 비용절감 종합대책 수립 등 **농어가 경영마인드의 확산체계를 구축**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07 : 21개 → '09 : 34 → '10 : 41)

○ 농기계 은행사업 등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 밭(이용 농가) : ('07) 16천호 → ('10) 80 / 논(작업 대행) : ('08) 7천ha → ('10) 77

❑ **(식품산업·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농식품 수출실적** 달성 및 **고부가가치·글로벌 식품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

○ '10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60억불 내외** 전망(12.15일 기준 55억불), 기존의 연간 사상 최대치('09년, 48억불) 초과, 일본 추월

- **식품산업 구조**가 **수출지향형으로 변모**하기 시작

* 주요 가공식품 생산량 대비 수출비중 : ('06) 6.1% → ('08) 6.6 → ('09) 7.2

○ 김치연구소 설립(3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마련(7월) 및 코리아 푸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11월)

○ **한식세계화 가능성** 확인 및 **국내 외식기업 해외진출** 가속화

* 외식 해외진출: ('05) 44개 업체 221개 점포 → ('08) 51, 797 → ('10.11) 56, 993

○ 쌀가공산업 활성화 방안('09.8) 추진 이후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가공용 쌀 소비량(쌀가루 소비량) : ('07) 18만톤(3만톤) → ('10p) 30(8)

❑ **(규제 개혁)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가속화**로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을 뒷받침

○ 영농여건불리 농지 소유제한 완화,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등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실시(3년간 총 **318건** 규제 개선)

- 농산어촌현장 애로개선(6월), 식품산업 관련 규제합리화(10월) 등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규제개혁 최우수부처로 선정(12월)

❑ **(수산업) 신수산 정책 추진 등**을 통한 수산업 성장 기반 구축

○ 수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3차 수산진흥대책**('10~'14) 수립

○ 지도·경제사업 부문 통합 등 **수협법 개정·시행**(10월)

○ 러시아와 수산협력 강화로 명태, 오징어 등 조업쿼터 확대

*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 ('10) 60,565톤 → ('11) 63,966

❑ **(식품 안전)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소비자 알 권리 증진**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10p)**은 191천ha**(전체면적 대비 11.0%)로 최근 5년('06~'10) 동안 약 30%의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및 이력관리제 확대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쌀, 배추김치, 배달용 치킨 등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8월)

- 국산('09.6월)에 이어 수입산 쇠고기 이력관리제 시행(12월)

❑ **(미래 준비)** 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발전 토대 마련** 및 **농식품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기반 구축**

○ 「생명산업 大展(6.17~19)」,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8.5) 등으로 생명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농식품모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본격 투자 준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5.26), 투자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농식품모태펀드 결성(9.30, 597억원)

❑ **(농어촌) 제2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계획**('10~'14)의 본격 추진 등 **범정부적 농어촌 발전전략** 마련

○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영 기틀 마련

* 농어촌 서비스 기준 : 주거, 보건·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

○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 강화

*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4월), 고용부와 협력강화를 위한 MOU(10월)

○ FAO아태총회(9.27~10.1), G-20 정상회의 등과 연계, 한국적 전통·경관을 보유한 농어촌 대표명소 20곳을 선정하여 홍보

❑ **(생산기반)** 기후변화 대응, 수질 개선 등 **안정영농 기반 구축**

○ 저수지 둑 높이기, 농경지 리모델링의 차질 없는 추진

* 저수지 둑 높이기(총 113지구) 91지구 및 농경지 리모델링(총 140개소) 134개소 착공

○ 새만금 방조제공사 완공(4월), 내부개발 추진을 위한 농업용지 구간 방수제(54km)공사 착공(7~9월)

* 세계 최장 방조제로서 기네스월드레코드 등재(8월)

2. 반 성

❑ **(농식품 물가불안)** 국제곡물 가격 상승,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식품 수급불안 및 물가상승**에 대한 **효과적 대응 미흡**

○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

* 소비자 물가지수(11월, 전년 동월 비) : 3.3% 상승 / 농축수산물 17.9% 상승

○ 채소류 수급안정 긴급대책 추진으로 급격한 가격상승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나, 높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완화시스템 미흡

* 채소류 물가 : (8월) 140.8 → (9월) 203.7 → (10월) 206.5→ (11월) 155.7

❑ **(쌀산업 구조 개선 미흡)** 연속된 풍년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는 어느 정도 성과, 구조적인 대응은 미흡**

○ 수확기 이전 수급안정 대책의 선제적 확정·발표(8월)를 통해 추가적인 쌀값 하락을 막고, 농업인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

* 산지쌀값 : ('10.1월) 140,855원/80kg → (8월) 131,900 → (11월) 136,760

○ 구조적 과잉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 마련 미흡** 및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도출

❑ **(농협법 개정 지연)**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

○ **농협**과는 지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이견을 대부분 해소**

○ 금년 2월 국회에 상정된 **농협법 개정안**은 원 재구성 등의 국회일정 등으로 인해 **상임위 계류 중**

❑ **(새로운 유형의 재해대응 미흡)** 연초부터 발생한 여러 재해에 대해 사후적 대응 위주로 대처하는 한계 노출

○ 동해(凍害), 일조량 부족, 벼 백수피해, 낭충봉아부패병 등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재해·질병 발생

-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복구비 지원 등 신속히 대응

○ 기상이변에 대한 예측 및 사전적 대응 체계가 아직은 미흡

❑ **(구제역 방역 대응 미흡)** 연초 발생한 구제역을 계기로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으나, **경북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발생**

○ 상반기 발생한 구제역(1월, 4월)을 비교적 조기에 종식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위 회복(9.27일)

* (한국) 4.8일 발생, 6.19일 종식(72일) / 일본 4.9일 발생, 7.27일 종식(109일)

- 가축질병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7월)

○ 방역체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 추가 발생(11.28일)·확산

❑ **(농어촌 관련 부처간 연계·협력 미흡)** 부처별 지원정책의 분산 추진으로 **지자체의 효율적·체계적인 사업화**에 **한계**

○ 향토산업 육성사업(농식품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지경부) 등 향토자원 산업화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연계·협력 미흡

○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추진시 사업간 통합·연계 고려 부족

Ⅱ. 2011년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1. 여건 전망

❑ **FTA 추진, DDA 협상 재개** 등 시장 개방 가속화

○ 한·EU FTA 발효('11.7), 한·미 FTA 비준 준비, 한·중 FTA 협상 개시 등 양자간 협상 진척 및 확대 전망

○ 최근 답보 상태인 DDA 협상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움직임

* 2011년을 DDA 타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G-20 정상회의)

❑ '1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제곡물가격 상승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강세 예상**

* 국제 밀가격 : ('10.1) 192$/톤 → ('10.6) 176 → ('10.9) 272 → ('10.12) 307

* 세계곡물 기말재고율(USDA) : ('09) 20.9% → ('10p) 22.4% → ('11p) 19.3

○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각국의 보호주의적 정책 강화, 자원확보 경쟁 및 자원무기화 가능성 증대

❑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녹색성장** 및 **생명자원**의 중요성 증대

* OECD 보고서('09) : 2030년 IT 혁명을 넘어서는 바이오경제시대 도래 전망

* 중국은 생물종자 분야를 7대 친환경 미래신흥전략사업으로 장려('10)

❑ 내년 **각국의 재정건전화** 경향, **세계경제 성장속도 둔화** 등은 우리 농림수산식품 분야에도 **새로운 대응 과제 부여**

* 세계경제('10 → '11) : 4.6% → 4.3(IMF) / 4.4 → 3.6(SERI) / 3.8 → 2.7(LGERI)

○ 농식품분야 보조금 개편 등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 강화**

○ 민간부문 투자 촉진, R&D 확충 등을 통한 **식품·외식분야 중심**의 내수·수출 **성장전략 마련**

〈 농업 ·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1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지지도**는 매우 높음

○ **도시민**의 **88.4%**가 국가경제에서 앞으로도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식

- 반면,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상황(관심층 30.7%)

○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안전한 식품 공급'**과 **'농산물 가격'**을

○ **'안전한 식품 공급',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보전'**을 중요한 농업·농촌의 역할로 인식

2 **2010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 **쌀 재고문제, 농산물 수급, 협동조합 개혁** 분야는 낮게 평가

3 농가경영 주된 **위협요인**은 **생산비 증가**(28.6%)와 **인력부족**(18.4%)

4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에 대하여도 높은 평가

○ 수입산 대비 가격,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우**(78.9%), **쌀**(75.8), **돼지고기**(68.0) 등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

○ 식품구매시 **채소**는 **안전성**, **육류・곡물**은 **원산지**를 중시

5 농업인의 **직업**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

○ **직업 만족도 34.0%**('09. 32.1), **주거 만족도 : 36.8%**('09. 30.0)

○ **노후준비** : 준비 없음(12.0%), 노후대책 충분(7.7%)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민·농업인·전문가 2,380명 설문조사(10.10~11월)

2. 중점 추진방향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위험관리 강화

- 가축질병 대응 강화
-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
-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
- 재해 등 위험관리 강화
-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강화

성장동력 확충

- 농식품 R&D 개편
-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해외 농림어업 개발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종자·생명산업 육성
- FTA / DDA 협상 대응

농어촌 지역 활성화

<농어촌 활력 증진·복지 지원>

- 인력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 농어촌 사회 안정
-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보조금 등 지원체계 개편>

- 보조금 지원방식 개편
- 민간투자 활성화
- 협동조합 선진화
- 조직역량 강화

Ⅲ. 주요 추진과제

1. 농어업 분야 위험관리 강화

1 가축질병 대응 강화

◇ 축산농가 **책임의식 고취, 출입국 관리 강화, 상시 예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 질병발생시 초동 대응태세 확립, 질병 확산 차단

❑ 농가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도입**(축산법 개정 추진 중)

- 소규모 농가까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용 신고, 교육 및 소독 의무화,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 최초 채용 및 자국 방문후 입국시 소독 및 격리기간(5일) 준수 등

○ 최초 발생 확인 농장은 매몰 보상금 삭감, 생계안정비와 가축 재입식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 추진

❑ 축산농장 등 가축 사육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방역의무 강화

○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 의무화 확대**

*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대상 : (현행)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운반자 → (확대) 수의사, 인공수정사, 컨설턴트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

○ 질병 전파 방지, 발생시 신속한 이력추적 등을 위해 **가축거래 상인 신고제 도입**, 미신고 상인 가축 거래 금지(축산법 개정)

❑ 축산 관계자 **해외여행 관리 및 국경 검역·검사 강화** 추진

○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입국시 신고 및 소독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중)

- 해외 여행 후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발생국 여행 후 질병 발생 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보상금 삭감

○ 법 개정 전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를 받아 소독필증을 받아야만 공항만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

- 공항만에 홍보요원을 배치하여 수화물도 소독하도록 유도

❑ **구제역 및 AI 발생 대비, 종축 분산관리 체계 구축**

○ 축산관련 연구기관(축산과학원, 축산기술센터) 부지 등을 활용하여 종축 분산사업소 설치·운영

- 한우 : 서산, 무주 → 12년까지 2개소(경북, 대관령) 추가 조성
- 젖소 : 경기 고양 → 11년까지 2개소(영양, 천안) 추가 조성
- 돼지·닭·오리 : 지자체 축산기술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종축 상호 교환 및 질병발생시 분산체계 구축(축산과학원)

❑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 대응 체계 강화**

○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검사능력 제고를 위해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 **임상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 강화**

*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킷트 공급 추진

○ 초기 신속한 매몰처리를 위해 악성가축 발생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몰처리팀**을 현장에 투입

2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

가 수급불안 품목의 가격 안정

◇ **주요 품목**에 대한 **단계별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으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물가 안정화 추진

❑ **농업관측, 계약재배** 등 **사전적 수급안정 시스템**을 중점 보완

○ 기상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시세예측모형**을 개발·활용하여 **농업관측의 실효성 제고**

- 추진체계 강화(전담팀 신설) 및 정보제공 대상을 유통업체로 확대
- 기상급변기(7~10월) 관측속보 수시발행 등 관측정보 활용도 제고

○ 계약방식 개선, 농협중앙회 참여 확대 등 **계약재배 내실화**

- 계약물량 : (현행) 생산량의 10% 수준 → ('11년) 15%(무·배추 20%) → ('15년) **50% 수준**
- 계약방식 : 일손 부족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포전매매 방식**도 **병행**
- 관측결과 **공급부족 전망**시 추가계약 등 **계약재배 규모 확대**

* (경계) 국내 계약 + 농가자율 확대 / (위기) 국내·해외계약 + 농가자율 확대

- 소규모 조합의 판매사업 대행을 통한 판로 확보, 채소전문작업단 구성을 통한 포전매매 방식 도입 등 농협중앙회의 역할 확대

○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기능 제고를 위한 **비축규모 확대**

- **국내산 양념류**(고추, 마늘)와 **수산물 비축 확대**

* 양념류 비축율 : ('10) 수요량의 3%(수입산) → ('11) 수요량의 5%(국내산 포함)

* 수산물 비축율 : ('10) 0.5% → ('11) 1%

❑ 가격 급등락 시 **긴급 수급조정**을 통해 **가격 변동폭 완화**

○ 도매시장 경매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조정제도 도입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대상 품목을 한정하되, 제도 도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 강구

* 농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상반기)

○ 위기경보 시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할당관세 적용**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 (현행) 협의 및 개정절차 시일 2~3개월 → (개선) 15일 이내

○ 가격 폭락시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최저보장가격 기준 현실화**

- 저장성이 낮은 품목의 최저가격을 현실화된 경영비 수준으로 인상하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계약재배 참여농가에 한해 적용

❑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가격수준별 위기대응 체계 구축**

○ 위기 정도에 따른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 매뉴얼에 기초하여 즉각 대응조치가 실행될 수 있는 체계 정비

○ 품목별 **가격안정대**를 **설정**, 가격 수준에 따라 **대응경보 발령**

- 평균가격 대비 실제가격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가격안정대 설정

- 가격의 상승·하락 폭에 따라 주의·경계·위기 단계로 구분

<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예시) >

	상승시	하락시
주의단계	수입 가능성 검토, 규격외품 출하 등	출하자 자율조절, 작목전환 등
경계단계	계약물량 공급확대 등	계약물량 가공(저장)용 공급 등
위기단계	해외물량 도입, 가격조정명령 등	유통명령, 산지 저장·폐기 등

○ **배추·무**에 **우선 적용**('11년), 주요 서민물가 품목으로 확대('12년)

나 유통방식 다양화 및 유통 효율화

◇ **유통방식의 다양화·선진화로** 불합리한 유통비용요인을 제거하여 **유통의 효율화 추진**

< 유통비용 비교 사례: 고랭지배추('09.8) **>**

◆ 도매시장 경유출하 : **1,950원**(포기당) / 농협계통 출하 : **1,310** (33% 절감)

❑ 유통방식 다양화 및 물류 효율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B2B 활성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및 외식업체 등의 직거래 확대 유도

○ 수요자별 요구품목·물량을 사전 예약, 확인된 수요량에 기초하여 공급자와 연결하는 **생협 방식**의 **직거래 확산**

* 현행 사이버거래소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Local-food 개념**의 **직거래장터 확충**

* 사례)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 '09년 개장, 연간 매출액 75억원, 방문객 22만명

○ **도매시장 하역체계 개선** 및 **IT와 연계한 운송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 우선 하역 효율화 효과가 높은 **배추품목**에 대해 **하차 경매제 시범사업 추진**('11년, 가락시장)

❑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 달성**

○ 조합간 품목연합을 통해서 주산지 농협들에게 top-down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조직화** 및 **조합간 통합** 유도

- 별도로 운영되는 APC·원예브랜드육성·물류비 지원 등을 조합 간 품목연합 중심으로 지원

* 정부 자금 지원 3년 후 공동계산매출액 10억 이상 증가 못할 시 지원 중단

○ **농가**의 조직화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조직력 강화, 상품의 균일 표준화, 체계적 마케팅 등 교육('11년 농협, aT 교육원에 과정 개설)

❑ **거래방식의 선진화**로 **가격변동폭 완화**와 **투명성 확보**

○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

○ 유통주체간 **대금정산조직**을 **신설**하여 **거래 투명성 확보**

○ 도매시장법인 등의 경쟁촉진·규모화를 위해 **평가제 강화**

❑ **수산물 산지유통 효율화**를 위한 **다기능 위판장** 도입 및 **시설 개선**

○ 3단계에서 6단계까지 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위판장 도입** 준비

* (현행) 양륙-선별-경매(3단계) → (개선) 가공-포장-유통 기능 겸비(6단계)

○ **시설현대화**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도모

* 노후화된 위판장 105개소 시설 개선('11~'16년)

다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 농어업인, 유통 종사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질서**속의 **거래제도 선진화** 달성

< 대형유통업체 부당요구 사례 >

◆ 쌈채류 납품 산지조직에 취급품목 이외의 김장용 배추 **저가 납품** 강요
◆ 축산품 납품 산지조직에 창립행사시 **원가미만 납품** 강요

❑ **공정거래 관행** 유도를 위한 **제도** 및 **관련법령 정비**

○ **'농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할인행사 제한, 판매대금 지급기한 등)' **신설** 검토(공정위 협의)

○ 산지유통종합평가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내역**(할인 행사, 납품가격) **제출 의무화**

○ aT에 설치되어 있는 「**공정거래지원센터**」**기능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현장조사를 정례화(분기별 1회)

❑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 수단 강화**

○ **생산자** 교육, 불공정한 거래관행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산지의 **능동적인 대응역량 강화**

○ **소비자단체**를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사회적 책임**을 **유도**

○ 소비지 업체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생산자단체간 **'농수산물 공정거래 협의체'** 구성 추진

3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

가 쌀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행

◇ **2015년까지** 벼 재배면적 축소,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 확대, 유통 효율화 등을 통해 **쌀 수급균형 달성**

○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마련, '11년부터 본격 추진

❑ **쌀 수요에 맞춰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15년까지 70만ha 수준까지 축소

* 벼 재배면적(밥쌀/전체)(천ha) : ('10) 856 / 892 → ('11) 808 / 844

○ '13년까지 4만ha의 논에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을 재배하여 **매년 20만톤씩 쌀 공급량을 감축**

* 타 작물 재배(40천ha) : 조사료 10천ha, 콩 8, 채소등 17, 다년생작물 5

○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에도 벼 이외에 타작물 재배

* 매입비축 농지면적(천ha) : ('10) 0.5 → ('11) 1.5(1,500억원) → ('15) 5.5

○ **조기관세화**를 통해 '15년 이후 매년 6만톤의 수입쌀 감축

- 2012년 관세화를 위한 논의를 2011년에 마무리

* 쌀 MMA 물량(천톤) : ('11) 348 → ('12) 368 → ('13) 388 → ('14) 409

❑ 현재 쌀생산량의 6% 수준인 **가공용 소비를 '15년에 일본 수준인 1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산업 적극 육성

○ 이명박정부 이후 쌀가공 활성화를 통한 소비촉진기반은 마련된 상태

구 분	이전('07년)	→	이후('10년)
쌀 가공업체수(개소)	556	⇒	761
가공용 쌀 소비량(만톤)	18		30
쌀가공산업 자금지원(억원)	0		1,600

○ ’15년까지 쌀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5대 분야 55개 과제 R&D 지원

5대 분야	기능성·가공용 품종 개발	쌀 제품 가공기술	가공기기 개발	쌀·부산물 이용 신소재 개발	쌀 가공제품 품질제고 기술
핵심 기술	당뇨예방, 성장촉진, 양조용, 가루용 등(12종)	쌀가루가공, 면류·장류 가공 등(15종)	간편식조리기 등(8종)	용기, 쌀 단백질 등 제품·기능성 소재(8종)	유통기한 연장, 품질유지 등(12종)

○ 쌀 가공업체의 안정적 원료공급체계 구축

- (1단계) 가공업체에 정부 쌀을 3년간 할인 공급(’11년 38만톤)
- (2단계) 가공용 쌀 전용재배단지 조성 : (’11) 1천ha → (’15) 30천ha

○ ’15년까지 쌀 수출을 **10만톤 이상으로 확대**

- (1단계) 정부 쌀 할인공급(가공품 위주) → (2단계) 초다수성 쌀(10톤/ha) 전용재배단지 조성, 생산단가를 낮춰 쌀도 해외시장 공략

* 쌀 수출량(가공품 포함) : (’09) 4천톤 → (’11) 5만톤 이상 → (’15) 10만톤 이상

○ 쌀가공산업진흥법을 제정, R&D·자금·감세 등 지원근거 마련

* 공공부문 쌀 제품 사용권장 및 대중화 추진

❑ 쌀 대표가격 형성기능 강화를 위한 **사이버상 도매거래 활성화**

○ **RPC 등 산지업체** : 벼 매입자금 배정시 산지거래량 기준 외에 사이버 거래소 출하물량을 감안하여 차등화

○ **소비지업체** : 거래수수료(거래금액의 0.3%) 면제 및 물류비 지원

❑ **산지유통주체 육성으로 시장교섭력 제고**

○ 농협중앙회 주도, 또는 광역단위 쌀 전문조합 설립 등을 통해 산지 쌀을 제값 받고 팔아줄 수 있는 기반 구축

○ RPC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벼 매입자금 등을 차등지원, 진입·퇴출기준도 강화

○ **쌀 자조금**을 **조성**(산지유통업체·정부 공동),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나 식량자급률 제고

◇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급률 향상 대책 마련·추진**

❑ 국제곡물가격 파동, 식품 소비추세 변화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07년에 설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추진

* '07년 설정 '15년 자급률 목표치 : 주식용 식량 54.0%, 곡물 25.0%, 칼로리 47%

○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조정** 및 **'20년 목표치 설정**

* 자급률 재설정 및 새로운 목표치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10.5～12월)

○ 쌀 위주의 곡물자급률 개념 중심에서 종합적인 식품자급률 지표로서 **칼로리 자급률 개념 중심으로 전환**

* 곡물 이외 채소류, 과일류, 육류, 수산물 등을 포함한 종합 개념

❑ 자급률이 낮은 밭작물과 사료작물 중심으로 국내생산 확대 지원 등 **자급률 제고대책 중점 추진**

○ 밀, 콩 등 중장기 **밭작물 산업육성** 방안 마련(3월)

- 주산단지, 경영체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대

○ 사료자급률 제고를 위해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 : ('10) 245천ha → ('11) 316 → ('12) 370

-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및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 재배 유도

* 사일리지 제조비 3만원/톤, 30ha 이상 집단화시 수확 기계·장비구입비 1.5억원 지원 등

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 **농작업 대행 확대, 사업간 통합모델 발굴** 등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영농효율화 도모

❑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정부) **활성화**로 기계화율 향상

○ 파종 등 **기계화가 낮은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 농작업 기계화율 : 경운·정지 96%, 파종·이식 11, 비닐피복 22, 밭 수확 8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25개(125억원) **추가 설치**('10까지 150개소 → '11까지 175개소)

❑ 일손부족 해소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벼농사용 농기계 은행사업**(농협)의 농작업 대행 확대 및 일관작업 체계 구축

○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책임운영자(농가)와 직영조합(농협) **확대**

* 책임운영자 / 직영조합 : ('10) 7천명 / 19개 조합 → ('11) 10천명 / 70개 조합

- 농작업 대행면적을 대폭 확대, 영세·고령농가의 영농부담 경감

* 농작업 대행 : ('10) 77천ha (벼 재배면적의 8%) → ('11) 140천ha (15%)

○ 사업 대상 **농작업 범위확대 일관작업 체계**를 **구축**, 생산비 절감 및 수익모델 창출

* ('10) 경운, 이앙, 수확 중심→ ('11 이후) 공동육묘, 헬기방제 등 추가, 일관체계 구축

❑ 밭농사용 임대사업과 벼농사용 은행사업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양사업간 통합모델 발굴·보급** 추진

○ 지자체에서 부속작업기를 지역농협(직영조합)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 도입(1월) 등 농작업 대행 활성화 기반 마련

4 재해 등 기타 위험관리 강화

가 농림어업 재해관리 시스템 개선

◇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재해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어업재해 제도개선 및 지원강화**

○ 신종재해 출현 대응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추진(6월)

- **폭염**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신규로 포함하고, 최근('10.1~4월) 발생한 **일조량 부족** 피해를 명문화

○ 농어업 **재해복구지원단가 현실화** 및 농축산영농자금 지원

- 농작물 재해복구 산정기준단가를 순차적으로 현실화 추진

* 단가현실화 계획 : ('10) 65% → ('11) 70 → ('12) 75 → ('13) 80

- 대규모 피해시 **특별융자** 및 旣대출 **융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

❑ 재해에 강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 개발·보급** 추진

○ 지역 및 작목 특성에 맞는 원예특작 규격시설 제정·보급

○ 대설, 강풍 등에 대비한 **내재해형 시설보급 지원 확대**

* 내재해형 원예·축사시설 지원('10 : 1,244억원 → '11 : 1,685억원)

❑ **재난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및 **재해관리 체계 정비**

○ 풍수해, 어선, 산불, 가축질병 등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대응할 수 있는 **종합재난정보시스템 구축**('11~'13)

○ 분산관리되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 정책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나 재해예방 기반시설 확충

◇ 극한 홍수 및 가뭄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어업기반시설 정비**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의 안전성** 제고

○ **대형 저수지**(저수량 500만톤 이상) 물넘이 보강 우선 추진

* '10년 까지 12개소 완료, '11년 시행 16개소, '12년 이후 7개소(총 35개소)

○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637개소) 및 양·배수장(140개소) 등에 대해 '17년까지 기능보강 추진('11 : 400지구 시행)

* 전국 수리시설 69천 개소 중 39천 개소(56%)가 30년 이상 경과

❑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 **배수갑문·방파제** 등 주요시설 **구조 개선**

○ **영산강·아산호 등 배수갑문 확장**으로 홍수배제 능력 제고

* 영산강('09～'12), 아산호('08～'13), 삽교호('11년 예비타당성조사)

* 삽교호의 경우 홍수량이 '79년 설치 당시보다 31% 증가(초당 5,460㎥→7,145)

○ 상향조정된 설계파고를 적용, **국가어항 방파제 보강·관리** 강화

* '11년 : 보강계획수립(37개항), 정기점검(110개항), 정밀안전점검(10개항)

○ **기존 저수지 둑높이기**를 통해 재해예방 및 지역용수 공급(2.8억톤)

*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113개소 추진중)

❑ 체계적 물 개발·관리를 위한 **농어촌용수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12월)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시설 및 수량·수위·수질 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가뭄·홍수 등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

○ 지역별 물 수급상황 분석을 통한 합리적 농어촌용수 개발·관리

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

◇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

○ 어선사고 건수 : ('10) 480건 → ('14) 240건(50% 저감)

❑ 노후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 설정 및 강화**

❍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 두께 계측 등 선령별 안전검사 기준 강화

* 21년 이상 노후어선 비율('09) : 척수 기준 12%, 톤수 기준 47%

❍ 주요 고장부위인 기관의 검사 및 전기설비의 절연성능 시험 강화

* (가칭) 노후어선의 안전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9월)

❍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지도사무소 기능 강화 및 전문 안전교육 과정 신설 추진

❑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

❍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동위치발신장치 설치범위 확대(어선법 개정)

* (현행) 길이 45m 이상 어선과 13인 이상 승선 낚시 어선 → (개선) 전 어선

❍ 사고 발생시 어선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구명조끼 및 구명뗏목 보급 확대

❑ 선체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노후어선 대체 및 기관·장비 현대화**

❍ 노후화된 어선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어선으로 대체 지원 추진

❍ 노후 원양어선 현대화 확대 지원('10 : 164억원 → '11 : 297)

5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가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품종·기술개발 등 적응 역량 확충**

❑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 선제 대응을 위해 **예측·평가 능력 강화**

○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최소화를 위해 **농업기상정보 정밀도 향상**

- 웹기반 지대별 농업기상정보 생산 및 제공 체계 개선

* 농업기상정보 : ('10) 월 2회, 문서서비스 → ('11) 월 3회, 웹서비스

○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품질 영향평가 실시** 및 **예측모형 개발**

-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물별 대응방안 마련

* 작물 영향평가 : ('10~'11) 4작목(벼, 마늘, 감자, 참다래)

- 벼, 마늘 등 작물 및 어종별 생산예측 모형 개발

* 작물별 : ('11) 2종 → ('15) 3 / 어종별(누계) : ('11) 1개(멸치) → ('12) 2 → ('16) 5

❑ 기후변화에 적응이 가능한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 아열대화 등에 적응 가능한 新**작물 도입** 및 **대체 품종개발**

- 열대·아열대 작물 도입, 특성 검정 및 참다래 국산품종 보급 확대

* ('10) 망고, 패션프루트, 오크라 등 15종 → ('11) 23 → ('12) 30종 이상(누계)

* 국산품종(참다래) 보급면적 : ('10) 90ha → ('11) 150 → ('12) 200 이상

-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고온 적응성 품종 및 내재해성 품종 개발

* ('10) 5과종 7품종 → ('11) 5과종 8품종(고온기 착색양호사과 등)(누계)

○ 작물재배지 북상 등 재배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재배기술 개발**

- 작물 주산단지 변동 모니터링 및 지도 작성, 작물별 재배적지 선정, 최적 재배관리 지침서 발간 및 보급 등 추진

* 모니터링 및 지도작성 : ('10) 4작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 ('11) 2(감, 감귤)

* 작물별 재배적지 선정 및 재배관리 지침서 발간('11～'16) : 사과 등 7작목

❑ 유해생물 발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대응체계 구축**

○ 병해충 저항성 품종 개발 및 외래병해충 감시시스템 구축

* 품종개발('11) : 7품종(벼줄무늬잎마름병, 밀 붉은곰팡이병 저항성 등)

* 외래병해충 예측시스템 : ('11) 지중해과실파리 등 5종 → ('12) 3 → ('13) 3

○ 해파리 등 유해생물에 대한 국제 공조 및 피해 경감 기술개발

- 한·중·일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 측 해역에서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는 해파리의 발생정보 공유 및 사전차단 방안 강구

* 한·중·일 해파리 국제워크샵 개최(10월 중)

- 부직포 도포 등을 통한 해파리 구제기술개발 및 불가사리 제거기구 개발·보급 등 추진

❑ 기후변화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총괄 조정기능 강화**

- 전담조직 확대·강화, 기후변화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기관간 정책 연계성 강화 및 새로운 사업 발굴

○ 농어민, 지자체 등의 **인식제고**를 통해 **주체별 대응력 강화**

-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포지엄 등 개최

나 탄소감축 역량 강화

◇ 농림수산식품분야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탄소시장 설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상쇄사업 본격 준비**

❑ 종합적 정보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 기존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통계 산정시스템**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계에 따라 **재정비**(6월)

○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 온실가스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DB 구축**('11~'13년)

❑ 국가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11년 목표관리업체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목표 설정(9월)

* 관리업체 지정(6월), 목표설정협의체 구성(7월)·운영, 감축잠재량 평가·감축방안 등 농식품분야 목표설정 방안 연구(~8월)

○ 목표관리대상 예비업체 등에 컨설팅, 교육 등 지원('11 : 2.3억원)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에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상쇄**(offset)**사업 활성화**

○ **농림수산식품분야** 상쇄프로그램 개발, 검·인증체계 설계 등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쇄시범사업 설계**(~12월)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이 산림부문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 **활성화**

- 조림에서 도시숲 조성 등으로 사업유형 확대, 참여기업을 온실가스 多배출 기업으로 다변화하는 등 사업활성화 도모

다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12년까지 **농어업 에너지 사용량** 10%(2,490억원) **절감**

❑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확대** 및 **합리적 이용 추진**

○ 농업용 온실 대상 **다겹 보온커텐**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

* 보급 면적(누계) : ('10) 6,004ha → ('11) 7,154 → ('12) 8,264

○ 어선 대상 **LED 집어등** 설치 및 **저효율 노후 기관** 교체

* LED 집어등 설치 : ('10) 133척 → ('11) 217 → ('12) 217

* 노후기관 교체 : ('10) 27천 마력 → ('11) 35천 → ('12) 35천

○ 면세유 공급 차등화 등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대상에 시간계측기를 포함하고, 절감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공급 차등지원**

- 에너지 절감시설(다겹 보온커텐)의 부실시공 방지방안 마련·시행(1월)

* 농진청 개발 특허제품 또는 동등한 수준의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

❑ 온실가스 감축 및 유류사용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본격 보급

○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 대상을 **축·수산분야**까지 확대(1월)

○ **목재펠릿** 수요창출 및 공급능력 확대로 **산업화 기반 마련**

- 공공시설, 주민편의시설, 산업체 등으로 목재펠릿 수요 다변화

* '11년 말까지 연간 22만톤 생산능력 확보 및 농산어촌 주택보일러 11천대 보급

○ 해양투기 금지('12년)에 대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

* ('10) 3개소 → ('11까지) 6개소 → ('13까지) 15개소

6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강화

가 친환경 농업 육성

◇ 1차 산업(생산)의 한계를 벗어나 **가공·유통 등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 추진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환경 조성, 소비 촉진 유도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로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

❍ 시군단위 친환경광역단지(600ha이상, 신규 7개소, 누계 32) 및 마을단위 친환경농업지구(10ha, 신규 16, 누계 1,036) 지정 확대

❍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종자 공급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흙 살리기 운동 전개

-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부하, 토양·수질 변화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12월)

❑ 고부가가치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확충**

❍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제품 다양화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한 맞춤형 가공시설 설치('11 : 10개소)

❍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가공기술 및 기술상용화 등 가공식품의 사업화 모델 개발 등 지원

* 우수경영체와 민간투자자 연계, 간담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확대**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생산자단체 → (개선) 생협 포함 식품·유통·외식업체까지 확대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위해 농협(산지의 거점 조직화)과 생협(소비자의 조직화)의 연계 체제 구축

* 농협의 도농교류 활동과 생협의 소비자 교육·홍보 활동 제휴 등 추진

* 생협 :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직거래 활동 전개,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요구 반영 및 가격 안정 도모(조합원수 : 50만명, 친환경 매출액의 약 7%)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환경 조성

○ 친환경농식품 가격 정보, 인증 정보,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하는 친환경 종합정보 DB 구축(11월)

○ 재포장 유통업체 등에 대한 **의무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화된 심사매뉴얼 제정·운영(9월)

* CCP(Critical Control Point) 심사매뉴얼 : 인증의 적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항목 및 취약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심사 기법

❑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직불제 대상 확대

* 축종 확대 : 4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 5종(오리 추가)

○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개정안 국회 제출, 3월)

* 산란계용 인증기준을 마련(6월)하여 시범사업 우선 추진(7월)

나 학교·지역사회를 통한 녹색식생활 확산

◇ **민간 주도의 식생활 운동 본격 확산** 및 건강한 식문화 정착

○ 미래세대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급식의 우수 식재료 공급망 구축**과 연계, 학교단위 교육에 집중

【녹색식생활 교육 전개】

❑ **교육기관·체험공간**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기관 및 농어촌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우수 체험공간 지정 확대

- 교육·체험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검토

❍ 초·중·고 교사, 영양(교)사 등을 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

* 초·중·고 교사(식생활 교육기관 직무연수), 영양(교)사(식생활 교육기관, 전국 급식 학교담당·교사 교육), 예비교사(교육대학교 대상 녹색식생활 교육 사업)

❍ 지자체 단위로 **지역 식생활교육 위원회**를 구성, **'지역 식생활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유도

* 12개 시·도 기본계획 수립 중(3개 시·도 완료), 7개 시·도 조례 제정 추진 중

❑ 환경·건강·배려를 고려하는 다각적인 **녹색 식생활 교육** 실시

❍ 가정식생활수첩 보급(100만부), 공익광고 제작, 학술행사 등 지원

❍ 초·중·고등학생 대상 **연구학교·방과후 교실·농어촌 체험** 등 지원

- 교육 전문인력, 교육교재, 커리큘럼, 교육·체험비용 등 지원

* 연구학교(10개), 방과후 교실(70개), 농어촌 체험(20,000명)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운동 확산**

○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민간 단체·업체의 **푸드마일리지 정보 제공** 유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지속 전개

【학교급식 종합지원체계 구축】

❑ 우수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확대 및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시범사업**(5개소) 추진

○ 우수 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이 구축된 **모범 지자체**를 **시범사업자**로 **선정**(1월)

○ 직거래 매취, 시설 개·보수, 저온유통 등 5개 분야 관련 사업을 시범지역에 일괄 지원

❑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6월)

○ 시범사업 시행주체(지자체·교육청·생산자단체 등), 농식품부, 교과부 등이 참여하는 식재료 공급망 개선 협의체를 구성(2월)

○ 중장기적으로 현행 학교 단위 수급체계를 **인접 시·군**의 학교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거점 체계**로 개편 추진

- 현행 **유통·물류시설**(APC·RPC·LPC,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지역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최대한 **활용**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계약재배 등) 및 **공동구매** 활성화 추진

○ 효율적인 계약재배 및 공동구매를 위해 지역산 제철 농수산물을 활용한 **표준식단제 보급**(교과부·교육청 협조)

식생활 교육 해외 선진 사례

❑ 【일본】 **식육기본법**('05.7월 시행) 및 **식육추진기본계획**('06.3월 수립)에 의거, 민관 협력 하에 **범국민운동**으로 식생활 교육 전개

○ 식육추진회의(의장 : 내각총리대신)에서 5년 단위로 「식육추진기본계획」 수립

○ 국가, 지자체, 식생활 교육 관련 각종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이 연계하여 식생활 교육 추진운동 전개

* 식육월간(6월)·식육의 날(매월 19일) 지정, 어린이 비만예방 추진, 임산부·유아 영양지도, 농림어업 체험, 식품폐기물 재생 체험 등

❑ 【프랑스】 어린이들의 **미각 형성** 및 **조리**를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이 **국민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 미각 주간(매년 10월 둘째주) 운영 및 요리미각예술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미각 교육 실시

○ 농업·지역요리 체험을 위한 그린투어리즘·교육농장제도 활성화

❑ 【영국】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운동**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실시

○ 모든 학교에서 로컬푸드를 이용한 요리 수업 의무화, 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 확산, 농민직거래장터 활성화

❑ 【미국】 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식생활 교육 실시

○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1980년부터 5년마다 보급

○ 학교에서 교실 농업 운동(Agriculture in Classroom) 및 팀 뉴트리션(Team Nutrition) 등 실시

❑ 【이태리】 **슬로푸드 운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미각체험·교육** 실시

○ 슬로푸드 운동을 통해 전통 식문화 보존 및 지역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다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류**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농식품 안전관리 추진

❑ 과학적인 안전관리의 기반이 되는 **위험평가 기능** 대폭 **강화**

○ 잔류허용치 (재)설정이 필요한 축산물·수산물의 **유해물질**을 **선정**하여 **위험평가** 추진(하반기)

* 대상 물질 : 중금속(납, 비소), 미생물(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장염), 화학물질(비스페놀A) 등

○ 품목별로 분산된 **위험평가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을 강화

- 위험평가 표준화 고시 제정(8월), 연구기술 개발 확대 및 외부 전문 인력풀(30여명, 9월) 구성

*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식품의 위해 가능성과 심각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과학적인 절차로서 소비자 신뢰확보에 필수적

❑ **위해요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위험관리 선진화** 추진

○ 생산·유통단계의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확충**

- 농작물용 고독성 농약 사용 및 축산 항생제 사료첨가 전면 중단(7, 11월)

* '10년 농작물용 고독성 농약(12종), 축산항생제(9종) 사용

- HACCP 적용대상 확대(식용란) 및 사업장점검 강화, GAP 관리 시설 확충('10 : 542개소, 산지 유통시설 중 14.1% → '11 : 600, 16.2)

* 축·수산 HACCP 생산비중 확대(축산 생산량 70%→ 75, 177 → 204개 양식장)

- 수산물 생산해역(60개소)을 청정·준청정·관리·금지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위생관리 실시(정착성 수산동식물 생산해역 등급설정 기준 고시, 1월)

- 지자체에 수산물 안전 분석장비 지원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

* '11) 3개소, 6억원 지원 → '13까지) 12개소, 142억원 지원

- 오염우려 지역(산업단지, 폐광산 등)의 농지·용수 등 재배환경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로드맵 설정 추진(6월)

- 안전성 검사는 취약분야 중심, 총 93천건(농산 72, 축산 12 수산 9)

○ 축·수산물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해외 문제 축산작업장 중심의 사후관리 강화(11개국 13회 이상)

- 수산물 위생약정체결 확대 및 등록공장 현지 위생 점검

* 위생약정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 뉴질랜드, 대만 등으로 확대

❑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 신설에 따른 **검역선진화 방안 수립·추진**

○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 수립 및 과학적 원리와 국제기준과 조화되는 검역제도 개선방안 마련(9월)

❑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위험정보교류의 활성화 추진**

○ **GMO, 방사선조사식품** 등 신식품 관련 국제동향 전파

○ 식품안전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위반내역 내용·공개절차 등을 통일**하기 위하여 **13개 관련법령 정비 작업 착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 소비자단체와 협력 사업을 강화하여 소비자 교육, 어린이·청소년 대상 식품안전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 식품안전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식약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간 정기 협의회 개최

라 소비자 권리 강화

◇ 농식품의 특성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핵심수단인 **인증·표시제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선택권 강화**

❑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인증체계를 정비**하여 믿을 수 있는 인증 시스템 구축

○ 유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일원화(12월)하고 농산·수산물로 분리된 3종(전통식품·식품명인·지리적 표시)을 우선 통합(8월)

*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인증제도는 관련기관 의견수렴 후 '13년까지 정비

○ 인증제별 다양한 로고 사용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가 농식품 인증 **통합로고 도입 추진**(12월)

○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고 정부는 인증기준 설정 등 제도 보완, **인증기관 지정**, 민간 **인증기관 관리·감독** 기능에 집중

❑ 소비자 희망을 반영하여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진**

○ 대중적 수산물(횟감용, 매운탕용 등)에 대한 의무적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시행 추진**(원산지법 시행령 개정, 12월)

* 소비자인식도 조사('10.6) :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찬성 77.1%

* 대상품목(안) : 참돔, 점농어, 지노래미, 뱀장어, 미꾸라지, 아귀, 홍어 등

❑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축산물 등급 표시방법 개선**

○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등급 표시 시 해당 식육의 등급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로 표시하도록 함(7월)

* 등급표시 : (현행) 등급 : 1 → (개선) 등급 : 1^{++},1^{+}, ①, 2, 3, 등

2. 성장동력 확충

1 농식품 R&D 개편

가 R&D 투자 확대 및 총괄 기획 기능 강화

◇ 방향성 있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R&D 총괄 조정·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R&D 투자규모를 대폭 확충(**전년대비 11.2% 증가**)하고 **방향성** 있는 **R&D 투자**로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토대 마련

○ 농정현안(쌀소비촉진, 가축질병 등)에 대응하고 미래수요(기후변화, 종자·생명산업, 바이오매스, 한식세계화 등)를 대비

○ 국가기반 구축(유전자원확보, 식량안보 등)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10) 7,752억원(농식품부 2,377, 양청 5,375) → ('11) 8,623억원(2,797, 5,826)

❑ **다부처 대형 R&D사업 공동기획**을 **적극 추진**하고 기획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청 공동기획단"** 구성

○ **다부처 공동 R&D기획**에 **적극 참여**하여 외연 확대

* Golden Seed 프로젝트(부·청), 생명자원소재산업화-이어달리기(교과부·농진청), 바이오정보산업(국과위, 지경부·복지부), 지능형환경관리(국과위, 4개부처) 등

○ 농식품부 R&D 기획단을 부·청 공동기획단으로 확대 개편

❑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총괄·조정**(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기능 강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개정 추진

○ 부·청, 산하기관간의 역할 재정립 및 명확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 R&D 추진체계 개편** 추진

* 농식품부(총괄·기획), 농진청·산림청(사업 수행), 실용화재단·수산자원사업단(산업화)

나 R&D 실용화·산업화 촉진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 제고 및 **우수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 기 개발된 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R&D자금 지원 강화**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확대

* ('10) 60억, 농림바이오 → ('11) 80억, 농림수산식품 분야로 수산·식품 포함

○ 우수기술보유 기업에 신용보증 및 저리 융자지원 도입(12년 시행)

❑ 민간 R&D기반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품생산 대행 조직을 육성하고 현장우수기술을 발굴·지원 추진

○ 작물 병리검정 등 전문성을 요하는 공통기반기술의 전문 R&D대행조직(CRO) 및 민간 위탁생산조직(CMO) 육성(10억원)

* CRO(연구)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예) 네덜란드 Key Gene사 : 분자마커개발 등 대행

* CMO(생산)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민간의 우수기술을 발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현장우수기술개발사업' 도입(10억원)

❑ 연구성과의 활용촉진을 기술거래 활성화 및 **"성과관리종합계획" 수립**(상반기)

○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거래기관**(실용화재단) **역량 강화**

○ 부·청 통합성과관리체제 구축, 성과활용 중심 평가지표 개발

* 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1~201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농식품 R&D 성과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연구용역(4월) 결과를 반영

2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 **전통·발효·기능성 식품 등 전략품목 중심**으로 **세계화 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확대

【인프라 강화 및 제도 정비】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조성** 본격 추진

○ 단지개발계획 수립('11, LH공사), 국가산업단지 지정·착공('12)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 및 **3대 R&D센터**(기능성평가·품질안전·식품패키징) 설계 등 기업유치·지원체계 구축

- 국내외 식품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개발지역에 대한 주택, 교통, 교육인프라 등 정주기반 사전 준비

○ 투자유치설명회, 투자에이전시(주한유럽상공회의소, Kotra 등) 등을 통해 해외 선도 식품기업(anchor)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전개

* 네슬레, 다논 등 식품기업과 R&D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유치동력 마련

❑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R&D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성장잠재력이 높고, 웰빙트렌드에 부합하는 전통·발효, 기능성 식품 등의 글로벌 상품화 기술개발 등에 집중

* 고부가식품 연구개발 지원 확대('10 : 183억 → '11 : 248)

- 세계김치연구소를 통해 김치 등 발효기술 연구를 강화

* 연구소 시설은 '1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광주)

○ 민간주도 **식품인력 양성 기반 강화** 및 고부가 전문인력 확충

- 제조·가공 및 품질·위생관리, 외국인 종사인력의 적응훈련 등 현장 생산인력 교육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추진

* 교육기관 지정 요건·절차·관리방안 마련(6월)

- 웰빙・전통식품 등 고부가 핵심 기술분야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과정**(석사급) **확대**

* ('10) 5개 대학 → ('11) 10개 대학(5개소 신규선정)

❑ **중소 식품기업** 애로해결·경영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경영상담·진단, 정부지원사업 정보제공, 현장기술 지도 등을 수행하는 **「식품산업진흥지원센터」 시범 운영**

- 현재 운영중인 식품·외식기업상담센터(aT)의 기능을 통합, 대학·연구소·유관기관·전문가그룹의 네트워크 구축・활용

* 네트워크 사업모델 마련(6월), 시범 운영(1개소, 하반기), 본사업 추진('12)

○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설**, 식품기업・외식업체 등의 시설 현대화, 원료수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1년 700억원 지원

*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3~4%를 적용, 시설자금은 10년, 운영자금은 1~2년 융자

【전략분야 지원】

❑ 김치·우리술·천일염 등 **전통・발효식품**을 **글로벌 상품으로 육성**

○ **김치**는 품질 표준화(맛 등급화) 및 맞춤형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상품김치 소비 확대

- 내・외국인 대상 김치 전시・체험행사 전개 및 김치요리 레시피 개발 보급

○ **술 품질인증제** 시행(1월)을 통해 우리 술의 품질 및 시설 수준의 현대화·고급화 촉진

- 술 품평회(9월) 및 햅쌀막걸리 출시(11월) 등 우수제품 발굴·홍보

○ **천일염**은 염전시설 현대화 및 성분·효능 연구 확대를 통해 게랑드 소금에 버금가는 세계 명품 소금으로 육성

- 염전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염전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염전원부를 작성, 염전관리시스템을 구축

* 영세한 염 생산자를 대상으로 염전시설 개선 등의 정책자금 지원(100억원) 및 염전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우수 염전 사례 확산

- 소금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해 품질 고급화('11년 시범사업 추진)

❑ 고부가 식품 **신 시장 창출 및 연관 산업** 육성기반 구축

○ **기능성 식품** 소재 발굴 및 **임상시험 지원** 등을 통한 시장 확대

- 각 기관에 산재된 **기능성소재 정보**를 종합한 **DB**를 **구축**하고 식품기업들이 제품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 인체적용시험 전단계인 동물·독성시험단계까지 임상시험 확대 지원

-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등을 통한 우수 건강기능식품 선정기회 확대,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확대**

* ('10) 원예, 전통식품 브랜드 등 4개 분야 → ('11) 기능성식품 추가 5개 분야

○ 수입의존도가 높은 **식품기자재의 국산화 대체** 등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3월)

- 식품기계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우수 식품기계 인증제 도입 등

나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및 농어업의 **2·3차 산업화** 촉진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성과 확산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11 : 100개 → '12 : 200)

○ 성장단계별(창업-중·소-중견기업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우수 기업 집중 지원으로 성공사례 도출

* 정책금융지원, R&D투자, 창업촉진 및 규제완화, 내수시장 확대 지원 등

○ 농업창업보육센터(10개소) 를 활용한 융합기업 창업지원 확대

○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하반기)

*「농어업경영체육성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관련 규정 개정 또는 (가칭) 농어업·중소기업 협력법 제정 추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평가** 및 **사업관리 강화**

○ 사업단의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예산 연계 강화

- (현행) 개소당 3년간 평균 27억원 지원 → (개선) 3년간 25억원 / 최대 2년간 9억원 추가(우수사업단) 지원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단협의회를 통한 사업단간 협력 체계구축 및 성공사례 확산

❑ 농어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활성화** 지원 확대

○ 창업 관련 인허가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뉴얼** 보급(1월)

○ 지역별 고품질·우수 제품 발굴, 마케팅 등 시장창출 지원

* KFE 등 박람회 전시 및 식품포털 등을 통한 시범판매코너 운영 등

다 한식세계화 및 외식산업 발전기반 구축

◇ **한식당 해외 진출**, 한식에 대한 **인식개선과 현지화**를 통해 현지 우량고객 확보 등 한식세계화 본격화

○ **한식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국내 외식산업 발전기반 구축

❑ **전략지역·품목**을 **설정**하여 현지 식습관과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한식세계화 추진**

○ '11년은 시장성·확장성 등을 감안하여 **북미, 동아시아**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 북미(뉴욕, LA), 동아시아(중국, 일본, 베트남)

○ **비빔밥, 불고기, 갈비** 등 기업의 해외 진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조사·컨설팅·마케팅** 및 **식재료 표준화** 등 집중 지원

* 전략품목(안) : 비빔밥(CJ, BIF), 불고기(불고기브라더스), 갈비(벽제갈비) 등

❑ **지역별 선호**에 맞게 맛과 메뉴, 서비스 방식을 **현지화**하여 한식과 한식당의 매력도 제고

○ 지역적 특성, 한식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전략 품목에 대한 **현지화 장애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맛, 소스, 서비스, 반찬 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팀 구성(4월)

* 미국 내 월별 한식 경험도는 8%로 태국 15%, 일본 2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현지화 부족 및 위생문제 등이 주요 원인('09, 美 리서치회사 Mintel 조사)

○ 한식조리 특성화학교 운영활성화(우송대, 전주대 등) 및 국제 한식조리학교 지원('11~'13, 전북)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 **한식**이 지닌 **이미지**(한식 BI, Well-being & Harmony) **활용** 극대화

○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 홍보대행사**를 통한 해외홍보

- (북미) 가장 동양적이고 정성담긴 깊은 맛,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 (동아시아) 현대적인 이미지, 몸에 좋은 보양 음식

* 제일기획과 Edelman(세계 최대 규모의 홍보회사)공동으로 사업 전개 중

○ **민·관 협력방식**의 **플래그쉽 한식당 설립**(뉴욕)을 통해 고품격 한식 전파 추진

- 연구용역('10.11~'11.3)을 토대로 민·관 협력모델, 운영방식, 메뉴 구성, 홍보 등 설립계획 마련(4월)
- 국내 외식기업과 현지 한식당의 투자 및 운영 참여 유도

❑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외식기업 해외 청년인턴 제도**(200명, 11년)를 **도입**, 청년고용 창출 및 외식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외식경기지수, 식재료 유통합리화,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등을 포함하는 **외식산업진흥대책 마련**(하반기)

* 외식산업진흥법 국회법사위 통과('10.12월)
* 외식경기지수 : 매출액, 고객수, 투자계획 등 외식산업 성과 및 미래전망을 보여주는 실증 지표이며, 미국 NRA(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레스토랑협회)는 매월 RPI(Restaurant Performance Index, 외식성과지수)를 발표

- 식재료 규격 표준화, B2B 확대를 통한 식재료 유통효율화
- 식품트렌드 및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가정식 대체식품(Home meal replacement), 반가공조리식품(Ready to cook) 등 새로운 시장 육성

라 농식품 수출 확대

◇ 연평균 16% 증가세('08년 이후)를 이어 **'11년 76억불 달성**(27%↑)

* 수출실적·목표 : ('09) 48억불 → ('10) 60 내외 → ('11) 76 → ('12) 100

○ 현지인 시장 공략 확대 및 고품질·안전 수출기반 조성

❑ 일본·중국·미국 등 **주력시장의 현지인 마켓 진입 확대** 및 ASEAN·EU 등 **신흥시장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시장 다변화

○ 주력 시장의 **현지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대량 수출을 확대하고, 교민 중심에서 현지인 시장으로 확산

* aT와 대형유통업체간 MOU를 체결, 직거래망을 구축하여 업체들의 진출 지원

○ ASEAN의 한류 열풍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및 유망 품목 발굴

* 싱가포르(김스낵, 딸기, 단감), 베트남(인삼), 필리핀(우유, 조제분유) 등

○ 유럽·중동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시험 수출** 추진

* 중동 지역 수출 여건 조사, 현지 재외공관과 연계한 홍보행사 등

❑ 향후 3년 내 최대 수출국이 예상되는 **대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여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및 한·중 FTA 대비

* 중국 농식품 수입 연 17.4% 증가(최근 5년간), 한국 농식품 수출 40% 증가('10년)

○ 물류·마케팅 기능이 결합된 **해외수출전진기지**를 **구축**(청도, 하반기 착공)하여, 대중국 공략 거점 역할 수행

* 상설 전시, 바이어 상담 등 추진 및 소량 주문·적기 납품 요구 대응

○ 중국내 최대 식품박람회인 **SIAL CHINA 2011**(5월)에 **주빈국**으로 **참가**,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안전성 집중 홍보

* 한국 식문화 홍보관, 학술 세미나, 이벤트 등 한국 농식품 붐 조성

❑ 안정적 물량 공급 등을 위해 **수출업체 조직화·규모화 및 단지 조성**

○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시장개척 역할 수행 유도

* 품목별 수출협의회 : ('09) 12품목 → ('10) 16 → ('11) 20

○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결합된 **품목별 수출선도조직** 지속 확대

* 수출선도조직 : ('09) 10품목 13조직 → ('10) 17, 21 → ('11) 18, 22

○ 신선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지향형 농어가**를 **양성**

- 생산단계 품질관리(농진청, 산림청), 해외 마케팅(aT), 검역협상·안전관리(검역·검사기관) 기능의 협의체를 출범(3월)하여 집중 지원

○ 안전·고품질 수산물 수출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산물 수출 가공단지**(부산 감천항내, '13년 완공) 건립 추진('11년 시설공사)

❑ **수출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자생력 배양 및 성과 제고

○ 단순 보조 성격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한편, 안전·품질관리 등 수출 인프라 강화 지원 확대

* 물류비 지원기준 : ('10) 표준물류비의 45%(중앙 15, 지방 30) → ('11) 35(10, 25)

- 물류비 지원대상은 성과평가제를 도입, 신규 시장개척 및 수출효과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개편

○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기존 분기별로 추진되던 판촉·홍보지원 사업 등을 연초에 일괄 선정하여 사업 성과 제고

- 수출업체들의 연간 계획을 토대로 국가별·품목별 쏠림 현상 조정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수출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관된 계획 하에 판촉·홍보, 바이어초청 등 추진

* 대규모 바이어초청(6·11월), Foodex JAPAN(3월), SIAL CHINA(5월) 등 권역별 대표 박람회 참가 및 해외 대형유통업체 판촉 행사 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3 국제곡물 가격상승 대응 및 해외 농림어업 개발

가 국제곡물 가격·수급불안 대응 강화

◇ 국제곡물가 수급 및 가격 동향의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입·공급 체계 구축**

❑ 기상변화, 물류, 에너지, 환율 및 수급동향 등 국제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농식품부, 유통공사, 민간전문가로 구성) 운영을 통해 곡물가 및 수급동향 분석

* 해외aT센터(10개소), 해외모니터(23명), 정보사이트(38개) 등 적극 활용

○ 선물가격, 재고율, 원유가 등 선행변수를 기초로 하여 매월 국제곡물시장 **위기발생 가능성 사전예측**(EWS)

- 단계별(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시행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으로 해외곡물 안정적 확보 추진

○ 유통공사와 민간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미국) 법인 설립 및 **유통시설**(산지·수출EL) **확보**(상반기)

* 초기단계 원활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자금 일부 출자(200억원)

○ **현지법인**을 통해 곡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 **콩·옥수수 등 10만톤 수입**(하반기) 및 연차별 확대 추진

❑ 국제곡물가 상승시 관계부처와 협의, 사료·식품 원료 **할당관세**(관세율 인하)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물가안정 도모

* 사료원료(겉보리, 옥수수, 대두, 주정박 등), 식용원료(밀, 매니옥칩, 맥아 등)

나 국제 농림수산 협력 확대

◇ **수원국과**의 **상호이익 증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 및 추진으로 **협력사업**의 **성과 제고**

❑ G20 개발 아젠다 계기, '11년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 도약의 시기로 하여 **농림수산분야 ODA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농업·수산·산림 등 **전 분야 ODA 통합지원 체계 마련**

- 식량안보, 자원외교 등을 종합 고려, 개도국과 우호적 경제협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 정립

* 해외개발사업과 연계 및 비구속적 원조 기준 마련 등

- 효율적인 양자간·다자간 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 개편 및 KOICA 등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수원국** 정책여건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절차, 매뉴얼 마련**

- 개도국과 우리의 정책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업발굴, 사업선정, MOU 체결 등 매뉴얼 작성

○ 농림수산분야 **ODA 전문가 Pool** 및 **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ODA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협력사업 내실화 기반 마련

- 협력사업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 **협력대상국 확대** 및 **협력사업 규모화·내실화** 추진

○ 인프라(물적자원)와 전문가 파견 등(인적자원)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기획협력사업 대상국 지속 확대** 및 **규모화 추진**

- KOICA 등 유관기관과 연계, 대상국별 협력사업 규모화 추진

* '10년 현재 DR 콩고, 모잠비크, 필리핀, 캄보디아와 기획협력사업 추진 중

○ **조업권** 등 **수산자원 확보**와 **연계**된 **수산분야 ODA 확대**

- 아프리카 및 남미 **주요 연안국**과 **양식기술 협력사업**을 전개, 연안국 수산·양식기술 지원 및 해외수산자원 개발 도모

* 페루 양식전문가 파견('11), 튀니지('08~'11), 알제리('08~'13) 양식기술 이전

-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인 **솔로몬**에 **어항개발 사업타당성 조사**('10.12~'11.10) 추진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솔로몬정부에서 어항개발 ODA사업 신청 예정

○ **수원국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 강화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타(KOPIA) : ('10) 10개국 → ('11) 15(에티오피아 등 5개국)

*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 ('10) 14개 사업 → ('11) 20

*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사업 본격화(3월, 총회 개최)

❑ **식량안보, 녹색성장** 등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 강화**

○ FAO, IFAD, 빌 게이츠 재단 등과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아세안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 협력사업 추진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추진 및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10월)의 성공적 개최

- AFoCO 회원국과 MOU 체결 및 인력양성 등 협력프로그램 운영

* ('10) 4개국(1.2억원) → ('11) 8개국 이상 (23억원)

다 상생적 농림수산 자원 개발

◇ 불안정한 세계 식량상황 대응 등을 위한 **해외 농림수산자원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수산·산림자원 확보**

○ 개발 대상국에 도움이 되는 상생적 개발로 국가간 우호도 제고

❑ (농업) 안정적 확보 체계 구축 및 개발 대상국가 확대

* 예산 : ('09) 240억원 → ('10) 240억원 → ('11) 320억원

* 진출(누계) : ('09) 5개국 10기업 → ('10) 7개국 18기업 → ('11) 9개국 22기업(잠정)

❍ 농장개발 운영방식에 **유통거점**(저장·가공·물류시설) **확보**,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경영모델** 적극 추진

* '10년 현재 농장형 14개 기업(78%), 유통형 4개 기업(22%)

❍ 해외 확보물량의 안정적인 유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진출 지역 다변화**로 기상이변 등에 따른 **수출 제한 등에 대처**

- 투자대상지 선정시 투자국의 과거 수출제한 등 이력 검토

❑ (수산) 자원 외교 강화 및 해외어장 개발 확대

❍ 한·러, 한·일, 한·중 등 **주변국**과 **자원외교**를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조업조건** 유지

-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 등 **한·러간 수산분야 교류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명태 조업쿼터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 명태 쿼터 : ('08) 28.5천톤 → ('09) 39.0 → ('10) 46.8 → ('11) 40.0 + 7(잠정)

- 한·중 어업협상을 통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대책의 조속한 실현 추진 및 우리 EEZ 및 NLL 부근 불법어업 단속 강화

❑ (산림) 산림자원 외교 다변화, 대상국 확대 추진

○ **진출지역** 및 **자원외교 다변화**로 '11년 해외조림 25천ha 실시

* '93부터 '10년까지 228천ha 해외조림 추진(11개국 21개 기업)

- 필리핀과의 신규 산림협력 체결(3월) 및 협력국과의 교류 확대

* '10년까지 인니, 파라과이, 튀니지 등 12개국과 산림협력 체결

○ 정상외교로 확보한 **인니, 캄보디아 40만ha 조림사업** 추진

* 투자기업에 정책자금, 조사비용 및 조림허가 취득 지원으로 조기 조림사업 착수

*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운영으로 신규사업, 투자수익모델 발굴

❑ 민간 중심 **농림수산자원 개발**과 **ODA**를 **연계**하여 **상생적 개발효과**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개발관련 논의** 적극 **참여**

○ **정부간 사전 협력**으로 토지확보 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도입 추진

* 한·필리핀 정상회담('09.5.30) 계기로 필리핀의 요청에 의해 추진 중인 '필리핀 복합산업단지(MIC)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KOICA, '10.4~'11.3)와 연계

○ **농림수산자원 개발**시 **ODA와 연계**하여, 개발 대상국과의 우호도 증진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 제고

○ **'국제농업투자 원칙' 제정 참여**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국익 및 국격을 동시에 제고

* World Bank 주축으로 FAO 등 국제기구가 연계되어, '11 상반기에 '국제농업투자 원칙' 제정 예정

* 우리부는 FAO 아·태지역 의장국 지위로 '국제농업투자 원칙' 제정시 적극 참여

◈ 민·관 합동(PPT) 필리핀 복합산업단지(MIC)조성 추진

○ **농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 녹색 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포괄**된 **복합산업단지**(MIC:Multi-Industry Cluster)

- **정부間 협력으로 대규모 토지 임차** 후, 지역별로 **농업을 주축으로 특색 있는 산업이 결합된 단지 조성**
- **우리의 풍부한 개발경험**을 활용, **필리핀의 풍부한 농업잠재력을 토대로** 여타 주변 산업과 녹색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발전

○ **현지여건**을 **감안, 곡물분야**부터 **착수 후 점진적**으로 **전·후방 산업을 연계하여 규모화·복합화**

- (개발분야) 건조·저장시설(10만톤) 조성, 농장개발(3천ha),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12천ha)·수집(15천ha) 등
- (협력분야) 농업기술, 농촌개발, 교육, 도로, 소수력발전 등

※ 현지조사 결과 민간참여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 및 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 '09.5.30,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로 **필리핀의 요청**에 의해 추진 중인 **"필리핀 복합산업단지(MIC)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KOICA, '10.4~'11.3)와 **연계 추진**

- '10.7~12 : MIC적지 선정을 위한 민·관 합동 현지조사 실시
- '10.11.25 : 한·필리핀 MIC개발협력포럼 개최(서울)
- '11.2 : 필리핀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11~'15)"에 포함(예정)
- '11 상반기 : 민간투자자 모집 및 사업모델 마련
- '11 하반기 : 사업 착수

4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수산자원 관리강화

◇ **친환경적이고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

【연근해어업의 패러다임 전환】

❑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구조**로 전환하여 지속가능 어업 실현

○ 노후어선 감척시 **적정규모의 친환경 유류절감형 선진화 어선 신조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감척계획 : ('09) 1,724척(1,295억원) → ('10) 1,165(775) → ('11) 684(412)

○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11 : 300척, 43억원), 어린고기 **탈출장치** 개발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

○ 정부 주도의 일률적 관리를 지양, **지자체 권한이양 추진**

- 대상 과제 선정(3월),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6월)

○ 업종간·지역간 어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정결과의 효력을 보장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 도입 추진

❑ **감척 위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어업구조 선진화로 개편**

○ 감척 외에 어업의 종류 통합·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 조정, 어선 경영규모 적정화 등 구조 개선 방식을 다양화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0.12, 법제처 심사)

【체계적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11~'15)에 따라 **연근해어업은 TAC, 마을어업은 어촌계 자율관리**로 **체계화**

○ TAC(총허용 어획량 제도) 대상 어종(11개 어종) 중 **지역성이 강한 품목**(제주소라, 흑산홍어)은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

○ 자율적 자원관리를 선도하는 **자율관리공동체**가 어촌 변화의 중심체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 유도

* 자율관리공동체 : ('10까지) 전 어촌계의 38% (840개) → ('11까지) 46 (925)

- 벌교·보성 지역 자율관리 공동체간 참고막 연합 등 **2개 연합체 시범 구성**,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MOU 추진**

❑ 바다숲, 바다목장 등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전담기구 출범(수산자원사업단, '11.1)을 계기로 **효과성·전문성 제고**

○ 조성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레저 프로그램과 연계, **수익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조성체계 구축**

○ 인공어초 적지조사 및 사후관리 조사, 수산종묘 방류사업 실태조사 등 **체계적 분석** 추진

* '11년 사업계획 : 바다목장(260억원, 17개소/신규 4개소), 바다숲(130억원, 12개소/ 650ha), 우량종묘방류(12억원)

❑ 수산자원 서식여건 등 **어장환경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어장 오염도 및 수용력 산정을 위한 **전국적 어장환경 실태조사**

* ('08~'11) 남해 → ('12년 이후) 동해, 서해

○ 어장환경 상시측정 관리제도 및 어장환경 평가제 도입 등 **어장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나 양식산업 성장동력 확충

◇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외해 양식 개발 확대** 및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추진

❑ 고부가가치 **외해양식어업 확대**를 통한 수출전략품목 육성

○ '12년까지 외해가두리 양식어장을 **15개소로 확대**

* ('10) 6개소(참다랑어4/참돔 등 기타2) → ('11) 11(6/5) → ('12) 15(8/7)

○ **참다랑어 완전양식**을 위한 5개년 계획('10~'14) 추진

* 어미군 사육관리 및 종묘생산 기술 개발('11년, 24억원)

❑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및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 **양식장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하해수(16℃) 사용 양식기술 보급 및 발전소 온배수 활용 난류성 어종 양식기술 개발 추진

○ **친환경 고효율 배합사료** 사용률 확대('10년 16% → '11년 18%)

❑ **갯벌의 적극적 이용** 및 **관상어 산업 육성** 방안 마련

○ 갯벌을 활용하여 수출 잠재력이 큰 **갯벌 참굴, 해삼 시범 양식** 및 갯벌양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고부가가치 **관상어 산업 육성대책**(2월) 마련

❑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 등 **내수면 자원활용 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어종인 뱀장어 치어(국제적 수출 금지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완전양식연구단 구성**(국립수산과학원, 1월)

○ 충남 금강에 참게를 이용한 **내수면 목장화 타당성 검토**

다 원양산업 경쟁력 제고

◇ **원양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과 원양산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원양어선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

❑ 수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신어장 개발** 지원

○ 원양기업 등의 **해외 수산시설**(양식, 가공 등) **투자 지원**(2개소)을 통해 해외 수산자원의 개발 거점으로 육성

* 사업자 선정 공고(1월) → 신청(2~3월) → 선정·지원(6월)

○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해외신어장 개발을 위해 **해외어장 자원 조사** 지속 추진(2개소)

* 수요조사(1월) → 사업자 선정(2월) → 자원조사 추진(3월~)

❑ 해외 수산투자 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 **원양산업 총조사 실시**

○ 기초조사('10.7~'11.1)를 토대로 원양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총조사를 실시(4~11월)

○ 원양어업 관련사업 및 해외합작 수산사업(어업, 양식업, 가공업, 유통업)의 운영현황 등을 파악, 원양산업 통계 인프라 구축

❑ **원양어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 **신규 참치 선망어선**(2척, 연내 완공) 지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

- 참치연승, 대형트롤선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건조 또는 중고선 도입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 참치선망어선 21년 이상 노후화 비율 : 한국(79%), 일본(22), 중국(0)

○ 오징어채낚기, 꽁치 봉수망 등 기타 업종의 **노후 선박**에 대해서는 엔진·냉동시설 등 **설비 현대화** 지원('11 : 10억)

5 종자·생명산업 육성

가 종자산업 육성 기반 확충

◇ **민간 육종기반 확충, 유통종자의 품질 강화** 등을 통해 **종자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민간육종 인프라 구축**으로 육종의 다변화 및 활성화 도모

○ 육종세대 단축, 신품종 조기육성을 위한 **방사선육종센터** 구축(~'13)

- 기본·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 시작('11 : 40억원)

* 방사선육종센터 : 132억원(연구실·실험실 등 3,000㎡), 한국원자력연구소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으로 신품종 육종의 시너지효과 도모

- '15년까지 562억원을 투자하여 20개 육종연구 민간기업을 유치

* 민간육종연구단지 : ('11) 설계, ('12~'13) 시설공사, ('14~'15) 장비구입 및 입주

❑ 종자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 유용 유전자원 탐색, 분자마커 개발 등 민간육종분야 지원 확대('10 : 192억원 → '11 : 242)

- 종자수출 등 차별화된 성과를 위한 「Golden Seed Project」 추진('12~)

○ 로열티 확보 등을 위한 해외출원 및 국외 적응성시험 확대

* 해외출원 : ('10) 6개국/76품종 → ('11) 6/90, 적응성시험 : ('10) 4/15 → ('11) 5/23

❑ 유통종자의 품질 강화 등 **종자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종자보증·DNA 검정 등 **종자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육성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 융복합연구센터(ARC), 석·박사인턴제 등을 통한 **육종인력 양성**

- 채소류 육종연구센터 지정(서울대)·운영 중('10~'19, 연 10억원 지원)

○ 육종기술지원센터(농진청) 운영으로 육종기술관련 서비스 지속

- DNA마커 개발 및 분석, 병해충 검정 및 교육지원 등

❑ **(축산) 종돈장간 우수 유전자원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민간 자율의 **"종돈개량 네트워크 추진위원회"**를 구성(1월), 유전자원 교류·선발·보급분야에 대해 종돈개량 통합관리

- **유전능력 우수종돈**(산자수 기준, 상위 1%) **도입** 및 국내 우수 종돈 선발·보급을 통해 국내 종돈 능력 향상 유도

- 종돈장 네트워크 구축사업 품종 확대(듀록 → 요크셔, 랜드레이스)

○ **전문 종돈장**(7개소) **육성, 피라미드형 종돈 생산체계 구축**

- 원종돈(GGP)과 종돈(GP)을 분리하여 생산하는 전문종돈장 그룹에 시설·운영자금 지원(50~100억원/개소)

- 돼지 인공수정센터(AI센터)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생산, 유통 등을 전문화할 경우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9억원/개소 이내)

❑ **(수산)** 품종보호 시행 대비 **해조류 신품종 개발 확대**

○ 수입대체 및 수출전략 품종의 이원화 체제로 개발

* 김, 미역 등 신품종 개발 확대 : ('10) 7품종 → ('11) 9

○ 신품종 여부 확인을 위한 출원품목 표준심사기준 마련(12월)

❑ **(산림) 우수 산림 종자·묘목 생산**으로 산지를 녹색자원화

○ 백합나무 등 기후변화 대응 수종의 종자 및 묘목 생산 확대

* 바이오순환림 묘목 : ('10) 12백만본 → ('11) 19 / 백합나무 클론 : ('10) 30만본 → ('11) 60

나 생명자원의 확보 및 산업화

◇ 다양한 농림수산 **생명자원 확보** 및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생명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및 **생명산업 육성**

❑ 농림수산 생명자원의 확보, 특성평가 및 DB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소재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 확충**

○ 세계적 수준의 농림수산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보유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적 형질 등 특성평가를 지속 추진

* 유전자원 확보 : ('10) 67만점 (세계 6위) → ('11) 72 → ('20) 95 (5위)
* 특성평가 : ('10) 41% → ('11) 48 → ('20) 63

○ 생명자원 종합정보시스템(DB)을 구축, 수요자에게 자원정보의 검색에서 분양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11~'13)

❑ 고부가 신소재 개발 등 **생명산업 R&D 확대** 및 **기반 구축**

○ 생명자원인 동식물, 미생물을 활용한 천연의약 신소재 등 생명산업기술개발 연구 ('11 : 522억원)

○ 농생명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착수

* '11~'20(10년간) 8,306억원 지원, 차세대 유용 유전자 발굴, 바이오 식·의약 소재 등

○ 식음료·의약품·화장품 등 제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위한 천연색소산업화 지원센터 건립('11~'13, 50억원)

○ 곤충생산단지 및 학습체험시설 등 조성('11 : 17억원)

❑ 생명산업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 생명산업 우수 연구성과의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11 : 80억원)

○ 기술·정보 교류 및 홍보 등을 위한 생명산업대전 개최(11월)

다 도시농업 활성화

◇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도·농 상생 발전의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 여가적·체험적 농사활동과 인공광원을 활용한 미래첨단형 수직빌딩농장을 육성하는 도시농업종합계획 마련

❑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도시농업공원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하반기)

* 외국의 예 : 얼롯트먼트법(영국), 클라인가르텐법(독일), 시민농원법(일본)

❍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도시농업 활성화 도모

* 서울, 부산 등 6개 지자체 조례 제정·시행, 대구, 경기 등 10개 지자체 준비

❑ **도시농업종합계획** 및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체계 정비

❍ **도시농업공동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옥상농원(Community Garden), 스쿨 팜(School Farm) 등 조성

❍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도·농간 교류 촉진, 생활농업경진대회 등 민간주도 도시농업운동을 전개·확산

❑ 인공광원과 최첨단농법을 활용하는 **수직빌딩농장**(식물공장) **등 미래형 도시농업** 육성 기반 확충

❍ 인공광원 활용 식물재배기술 등 **기초 연구에 대한 R&D 확대**

* 연구용 식물공장을 건립('10.10월, 농촌진흥청)하여 기초기술 연구 기반 마련

6 FTA / DDA 협상 대응

가 FTA 협상 대응

◇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대비**한 **농어업 체질 개선**과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움직임에 **전략적 대응**

○ **미국, EU**와의 FTA 비준 대비, **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터키** 등과 본격 협상 및 **중국**과의 협상 개시결정 대비

❑ **국내 농정여건** 및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FTA 개방수준**을 **확대**하되, **대 국민 공감대 확산** 노력 병행

○ **(중국)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적극 강구 및 **사전적 대응** 강화

-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고려,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

* 우리나라 농수산물 교역액(261억불)중 중국의 비중 : ('09) 16.1% 수준(42억불)

* 한·중 FTA 협상 개시 전 민감분야 처리방안 사전 협의('10.9월, '11.1월(잠정))

○ **(한·중·일 산관학) 식량안보·식품안전** 분야 협력방안 등 연구

* 환태평양 경제연대 협정(TPP)에 미국, 호주 및 일본의 참여 동향에 대응

○ **(호주, 뉴질랜드) 쇠고기,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대하여 협상력을 집중하고, 연구·인적 교류 협력 확대

* 대 호주 농수산물 수입 ('09) : 쇠고기 482백만불, 밀 222, 낙농품 87

❑ FTA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개도국과의 **협력사업 확대** 및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토록 노력

나 FTA 대응 경쟁력 제고

◇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개방시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07년 마련된 한미 FTA 보완대책을 토대로 대처하되, 이후 FTA 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완

❑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수립된 **한·미 FTA 보완 대책**('07.11월)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국 농어업의 대응력 강화

❍ **품목별 경쟁력 강화, 농수산업 체질개선, 단기적 피해보전 제도 운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사업 지속 추진

- **10년간**('08~'17) **투·융자계획**(21.1조원)에 부합하도록 예산확보 및 신규 사업 지속 발굴

- 농어업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 각 FTA별 영향분석, 대책 추진 경과 등을 고려,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한·EU FTA를 계기로 보완된 **축산업 경쟁력 대책 중점 추진**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우수 종축 공급, 학교우유급식 확대, 각종 백신 지원, 가공원료유 지원, 농가 조직화 등에 중점

❍ 환경부담 경감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 확대

- 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누계) : ('10) 56개소/3 → ('11) 70/6

- 액체비료 품질 향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숙도 기준 제정 및 살포 가능 지역 확대**(농경지·초지 → 골프장·임야 추가)

❍ 돼지고기 등급기준 보완,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 양돈장 이동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다 FTA 피해보전 제도 개선

◇ FTA 체결국에서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에 대비,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를 마련**하여 농업인 불안감 해소

❑ 한·미 및 한·EU FTA 발효에 대비, **소득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운용**을 위해 FTA특별법 하위법령 개정(6월)

○ 현행 법령상 시행기간을 연장, 소득보전직불은 협정발효 후 7년, 폐업지원은 협정발효 후 5년간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시행기간 : 소득보전직불 2010년 말까지, 폐업지원 2008년 말까지

❑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보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6월)

○ **소득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으로 변경

- 직불금 산정방식은 가격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으로 기준 변경
- 피해보전 비율은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

◈ 농가당 직불금 : 생산면적(마리) × (기준조수입 - 당년조수입) × 85%
* 기준조수입 : (품목별 직전 5개년 조수입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조수입) × 80%

○ **폐업지원제도**의 **대상품목 선정방식** 및 **발동요건** 개선

-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 수입피해영향을 분석하여 지원여부 결정
- 과도한 신청 방지를 위해 **지원금 산정방식**을 **순수익 기준**으로 변경

◈ 농가당 폐업자금 : 폐업면적(마리) × (조수입 - 경영비 - 자가노력비 - 토지용역비 - 자본용역비) × 3년

라 DDA 협상 대응

◇ **2011년 협상타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수산업 민감성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

❑ WTO 사무총장이 '11년 DDA 협상 타결을 위하여 새로 제시한 협상 계획에 따라 **DDA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

○ 향후 협상은 '11.3월말까지 수정 세부원칙 마련, 6~7월말까지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

* G-20 서울 정상회의 및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11년 DDA 타결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한 바 있음

❑ **농업**분야 세부원칙 협상에서 주요 **관심사항 중심**으로 **실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품목별 개방계획 협상에도 적극 대비

○ **특별품목·민감품목** 등 핵심사항에 대해 수입국그룹(G10) 및 개도국그룹(G33)과 공조를 강화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

○ 품목별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농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특별·민감품목 선정 등 **이행계획서 작성 준비**

○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도국그룹**(G33)**과 공조**를 **강화**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여건 조성을 추진

❑ **수산**분야는 면세유 등 민감 이슈에 대해 일본·EU·대만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대

❑ **협상 타결시**, 향후 확대될 수출 시장을 겨냥하여 **주요 수출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제고**

3. 농어촌 지역 활성화

1 인력 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가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

◇ 「진입 준비 - 신규 창업」의 **인적자원 관리체계**로 개편, 미래의 핵심 농어업 인력을 적극 육성

❑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유인대책** 추진

○ 농대생 대상 영농정착교육과정 운영, 농고생 대상 현장훈련 및 진학우대 등 **안정적 후계인력 양성교육 기반 마련**

* 현장과 연계한 기술습득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10개 농고, 11개 농대)

- 선진어업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수산계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9개교) 등 현장실습 중심의 업종별·품목별 교육 확대

○ **농수산업 인턴제** 효과 제고를 위해 **전담운영기관 지정**(2월) 등 관리시스템 내실화

- 인턴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우수 선도농어가의 발굴·관리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 개선**

○ 후계농업인 자금지원을 **자율신청방식**으로 **전환**,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투자 유도

* (현행) 개인별 대출한도액 배정 / 사업 당해연도 지원→ (개선) 2억원 한도 내 자율신청 / 3년간 대출 가능

○ 후계어업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 인원 및 지원규모 : ('10) 504명, 200억원 → ('11) 1,000, 400

* 정예어업인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수산업 진흥법」 제정(국회 상임위, '10.12월)

나 농어업 교육·컨설팅 정비

◇ **현장수요에 맞춘 교육·컨설팅**을 통해 우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농기업의 경영을 선진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교육 운영**으로 교육 효율성 제고

○ 농업교육기관·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만족도·역량변화 등 성과측정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

❑ **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 전국대표실습장, 선도농가실습장 등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교육기관 간 연계 활성화로 현장학습기반 구축

* ('10년 현재) 전국대표실습장 8개소, 선도농가실습장 45개소

○ 품목별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평생학습체계 확립

* 단계별(진입, 성장, 전문), 등급별(초급, 중급, 고급) 교육과정 개발·운영

❑ 농어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 유도를 위해 **전문경영인력을 육성**하고 **조직·법인 중심**으로 **컨설팅 비중 확대**

○ 전문경영인력에 대한 농기업 수요조사를 실시(1월)하고, 타산업 분야 출신 우수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전문경영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DB 구축 등 체계적 관리

○ 생산기술 위주의 농어가단위 컨설팅 비중을 줄이고, 품목대표조직, 연합사업단 등 **조직·법인 비중 확대**

* 개별농어가 : ('10) 86% → ('11) 50%, 조직·법인 : 14% → 50%

다 귀농(어)·귀촌 지원대책 정비

◇ **정보제공·교육, 농어업 창업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착 유도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농촌유치활동 확대**

○ **지자체별 전담창구를 구성**, 이주희망 도시민의 이주 준비, 정착 등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전담창구 : ('07) 10개 시·군 → ('10) 22 → ('11) 24 → ('13) 30

○ **귀농·귀촌 상담가**를 **양성**하여 귀농인의 농촌정착을 지원

- 귀농귀촌 설계, 정보제공 등을 담당할 (가칭)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정 개설(6월)

* 시군의 귀농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이주 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지역정보 제공 등의 역할 담당

❑ **귀농·귀어희망자** 대상의 **다양한 정착 지원 방안** 마련

○ 새로운 수요(대기업 퇴직예정자, 제대군인 대상 등)에 맞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등 **귀농·귀어 교육프로그램 확대**

○ 귀농·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영농·영어자금 등 지원**

- 농지구입, 시설설치, 양식장구입, 어선구입, 주택신축 등 초기 영농·영어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 지원('11 : 600억원)

- 빈집정보 제공,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등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

*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의 농어촌 빈집정보를 일괄제공(6월)

라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한 활력증진

◇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

○ 중앙과 지자체에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전개

❑ **핵심리더**를 **육성**하여 농어촌 사회 변화를 주도

❍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지도자 소양, 마을경영, 조직운영, 마을발전계획수립 등 교육

❍ 핵심리더 주도하에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 도모

-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활성화 등

❑ 핵심리더를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농어촌 활력 창출 추진 운동** 전개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추진기구**(범국민운동본부) **설치**

- 각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범국민운동 전개

❍ 농어촌의 마을단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 운영**

❑ 농어촌에 활력있고 **희망찬 분위기 확산**

❍ 마을간 경쟁 촉진을 위해 (가칭)**"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시상

- 잘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등 집중 지원

❍ 1사1촌 운동 등과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

2 농어촌 사회 안정

가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정책 강화

◇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 체계 확립**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구성·운영**(3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조정, 달성정도 점검, 개선방안 등 협의

○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 등 8개 분야의 **서비스기준 달성정도를 평가**(10월),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반영

❑ 정부 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농어촌영향평가제 시행**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농어촌영향평가 지침 통보**(3월)

* i) 소규모 분산거주 등 농어촌 특성 고려 ii) 지역경제, 경관,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포함

○ 1~2개 정책을 선정(4월), 영향평가를 통한 대안 제시(12월)

*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삶의질법 개정, 6월 국회제출)

❑ **삶의 질 향상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체계 개편**

○ 주요 정책과제(2개)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 정책 보완

* 세부사업(133개) 추진실적 평가(3월), 주요과제 현장 심층평가(상·하반기)

나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

◇ **고령농** 및 **농어촌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여가활동 지원 확대

○ **농지연금제도 시행**(1월부터 신청 접수 및 연금 지급)

-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원

* 65세이상 농가의 30.8%가 농지연금 가입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65~70세)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 활성화**

* 농업인이 매도·임대할 경우 ha당 월 25만원 지원('11 : 623억원)

- **45세 이하의 농업인**도 경영이양농지를 **양수**할 수 있도록 확대

* ('10)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 ('11) 45세 이하의 농업인(3년이상 농업경영) 추가

- 경영이양을 통한 소득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농촌 노인의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등 **지원 강화**

*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 ('05~'10) 500개소 → ('11까지) 582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지속 확대

○ 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지자체 워크숍 개최, 농업인 대상 홍보 리플릿 배포 등)

* 건강보험료 지원(436천세대 / 1,544억원), 연금보험료 지원(219천명 / 869억원)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강화** 및 영유아 양육비 부담 경감

○ 대학 졸업 후 취업난 등을 감안, **학자금 융자 거치기간 연장**(1→2년)

*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예산 : ('10) 505억원 → ('11) 605억원

○ 학자금 융자 지원대상을 방송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으로 확대

*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11년 지침 개정

○ 취학전 시설 미이용 아동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35% → 45) **확대**

* 지원비율 : 시설 이용 / 미이용 ('10년) 70% / 35% → ('11년) 70 / 45

❑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강화 및 농어촌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경영능력 및 리더쉽 향상 등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

*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11～'15) 수립・추진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영농교육** 및 **농촌정착지원 과정** 운영

* 기초농업 및 1:1 맞춤형 농업교육(각 500명), 농촌정착지원과정(1,100명) 운영

○ **영농 도우미 지원조건**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 영농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 10일 이상 입원 → 5일 이상 입원

❑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어선원 처우개선** 추진

○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체육실 포함)

- 100명 기준 숙소를 전국 주요 어항에 10개소 건립('10년부터 매년 1~2개소)

* 외국인 어선원 이탈율 : 20톤 이상 어선 20.6%, 어업 31.1%

○ 어선주가 해상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외국인선원특별회비**(1인당 연 60만원)**인하를** 중재·조정, 실질임금인상 및 복지향상 유도

* 특별회비 납부액 : ('08) 1,726백만원 → ('09) 2,027 → ('10p) 3,000

다 농어촌 맞춤형 지역개발 및 주거여건 개선

◇ 생활권을 고려한 정주권 개발, 지역유형별 맞춤형 개발모델 적용 등 지역주민 주도 **상향식 맞춤형 지역개발** 추진

○ **민간과 협력**해 **소외계층**의 **주거 개선** 지속

❑ 농어촌 주민의 생활권역과 동선을 고려해 **중심지와 마을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맞춤형 정주권 개발체계** 구축

○ 산업·정주 등을 포괄하는 **통합형 지역개발 모형**을 **보급**(2분기), 지역별로 **유형별 개발전략**(도시·농촌·도농연계형 등) 수립 유도

* 「통합형 지역개발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농촌경제연구원, '10.12)

○ 중심지와 배후마을 개발전략을 포괄하는 **시군 단위 5개년 중장기 계획**('10~'14)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 정부, 시·도 합동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차년도 예산편성 반영

❑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소외계층 주거복지** 사업 지속 추진

○ 주택개량(8천호) 융자 지원 및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추진

* 농어촌뉴타운 조성(총 5개소) : 기반공사 완료 및 주택건축 착수('11년)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감축을 위한 부처 연계사업 추진

- 농식품부 :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대상에 주택개량 융자 우선 지원

- 환경부 : 슬레이트 종합대책 수립 및 처리비 지원

* '11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2,500동(28억원)을 농어촌에 우선 배정

○ 시민단체·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민관협력 복지사업의 모델로 활성화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추진계획 : ('08) 38가구 → ('10) 165 → ('11) 230

3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 **재해·경영·작업위험**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등 **지원체계**를 **확대·정비**하여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시행지역 확대

○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41개 → 50)

* '11대상 품목(50개) :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5어종

○ **시범품목**의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콩, 양파 등 5개 품목)

○ **시설보험**(비닐하우스) 대상 확대(連棟 추가), 시범품목('10 : 4품목 → '11 : 8) 및 사업지역('10 : 11시군 → '11 : 20) 확대

❑ 보장재해 및 보장수준 확대 등 상품개선으로 위험관리 내실화

○ **과수품목**은 특정재해 보장방식에서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전환, **보험기간 연장** 및 **자기부담비율 다양화**

* 추위에 약한 2개 품목(복숭아, 포도)부터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11)

* (기간연장) 발아기~수확기 → 연중 / (자기부담비율) : 20~30% → 15%형 추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조피볼락)은 가두리양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주 계약**으로 하는 등 계약방법 개선(5월)

❑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 농어가의 자구노력 중점 지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위기 농가의 **상시지원 체제** 구축·운용('11 : 2,400억원)

○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 저리 자금으로 대체하는 **농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규모 확대**

* 지원규모 : ('10) 600억원 → ('11) 700 (3%, 3년 거치 7년 분할)

❑ 농어업인 재해공제 활성화를 위해 **보상수준 및 가입대상 확대**

○ **농업인 재해공제** 보상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지속 확대

* 사망시 공제금(백만원) : ('10) 40~60 → ('11) 50~70 → ('14) 100

○ **어업인 재해공제** 가입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지역별·가입자별 특성을 고려한 **보험의 보장범위 개선**

- 어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를 재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

- 보장기준이 되는 **재해**의 **범위를 현실성 있게 개선** 추진

* 경운기, 트랙터 등으로 갯벌 내에서 이동 중 사고에 대해서도 재해보장

❑ 농작업 재해경감을 위한 **장비·기계 개발 및 교육 강화**

○ 농작업 편이장비 및 보호장비(포도가지 유인기 등 3종) 개발·보급

*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조성(40개소),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143개소)

○ 농작업 안전관리지침 및 체험 프로그램(포도, 고추, 참외) 개발

○ 농용트랙터용 블랙박스(도난방지 및 구조신호 전송장치 통합형) 개발

* 사고검출 및 기록, 시동방지, 위치추적, 긴급호출 등

○ 농기계 작업 사고, 교통사고의 현황분석 및 교육자료 제작·보급

4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가 향토자원 산업화

◇ **부처간 협력**에 의한 **체계적 지원** 및 **창업여건 개선** 등을 통해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 촉진

❑ 특화된 지역 농산물, 경관, 전설 등 **농어촌 유·무형 향토자원**을 **산업화**하고,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 다변화** 추진

* 충북 영동 : 와인 생산 및 포도와 와인을 접목한 관광상품(와인트레인) 개발
  · 와인트레인 내방객수 : ('07) 8,750명 → ('09) 10,475(영동군 인구 : 50,918)

❑ 향토산업 관련 **부처·기관간 연계·협력**으로 정책 시너지 제고

○ 농식품부·지경부 MOU(1월)를 기반으로 **공동지원단** 구성,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관된 지원체계 운영 및 투자효율성 제고

- MOU 체결을 계기로 향토산업 관련 부처간 연계·협력 강화

* 향토자원 발굴(농진청) — 가공·마케팅 등 산업화(농식품부) — R&D(지경부) — 지식재산권화(특허청) — 향토자원 DB구축(행안부)

○ 시·군·상공인단체·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자원산업화 TF**를 운영하고, 대학·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협력 강화

❑ 창업보육·수요창출 지원 등 **신규 창업** 및 **마케팅 여건 개선**

○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시제품 생산·품질개선·기술교육 및 보급 등 '농가단위 창업보육지원센터'로 육성

* 창업보육 지원센터 : ('10) 4개소 → ('11) 8 → ('12) 12

○ '바이어의 날' 운영 등 **농어촌산업박람회**(6월)를 향토산업 제품의 최대·최고의 전시장으로 발전,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나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저변 확대

◇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도시학생의 **농어촌 체험기회 확대**

○ 농어촌 체험관광 900만명 방문 목표로 추진('10년 774만명)

❑ 지역의 자연·생태자원, 음식,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 **특색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

○ 기존 체험마을과 연계할 수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거점 지역에 향토음식,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한우 테마 불고기팜(울주군), 정원생태공원(합천군) 등 11개 지구 신규 조성 착수

○ 방앗간, 마을서원, 폐교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농어촌 관광문화 공간 조성**

* 6개 시·군(횡성, 옥천, 서산, 완주, 의성, 서귀포) 대상 시범 조성('09~'11)

❑ **농어촌 대표 관광명소**를 **발굴**하여 상품화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관광명소 및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화 및 맞춤형 여행코스 개발 등을 통한 **여행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 G-20 연계 Rural-20(대표명소 20곳) 선정 및 여행상품 개발 경험 확산 추진

○ 문화부, 문화예술위원회, 농협, 희망재단 등 관련부처 및 기관과 협력, **잠재 전통문화 가치 발굴 및 새로운 관광자원화**

- 농어촌 문화예술공연·문화교실 지원, 청소년 문화체험 등 추진

○ 농어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

- 마을의 체험휴양 시설,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여 **수준별 등급제 도입**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8월, 국회 제출)

- 5개 부처(농식품부, 행안부 등)가 조성한 체험마을(1,675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구축 및 **통일된 사후관리 지침** 마련(6월)

○ 농촌체험마을 **지역간 협의체**를 구성, **전국 네트워크 구축**

- 경험, 지식, 아이디어, 정보 등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성원간 협력을 통한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 활성화 유도

❑ 1사1촌 운동이 1교1촌 등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동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고, **도심지 학생의 농어촌체험 기회 확대**

○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1사1촌 우수기업 사회공헌인증 등을 통해 **농어촌 마을과 결연하는 기업체** 지속 **확대** 유도

* 1사1촌 결연기업 : ('09) 7.7천 개소 → ('10) 8.2천 → ('11) 8.5천

○ 농어촌 체험 및 도농교류 저변 확대를 위해 **1사1촌 운동**의 **교과서 반영** 추진(교과부 협조)

○ 도심지 학생의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3~12월) 및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제공을 위한 **'농어촌 유학'** 사업 확대

- 도심지 초등학교와 체험마을 간 결연을 통한 체험학습 운영

* 전국 20개 초등학교 대상, 1교당 10백만원 지원

- **농어촌 유학 지원사업 확대**, 유학 운영자 교육 및 운영매뉴얼 제작, 대도시 학부모 홍보 추진

* ('10) 3개소 → ('11) 5개소

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된 **공동체 활성화(1,100개소)**를 통해 **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 도모

❑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 **농어촌 공동체회사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등 강화

- 우수사례 발굴·보급, 안내책자 발간, 워크숍 개최 등 추진

* 양양 송천 떡마을 : 부녀자 15명, 월 평균 170만원 수준 소득

* 완주 안덕 체험마을 : 노인 15명, 월 평균 30만원 수준 소득

- 상담, 교육·컨설팅 알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지원센터 개설**(2월)

* 수시로 농촌 공동체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 제도개선 추진

○ 지역발전 기여도, 주민참여 정도 등을 심사, 공동체회사 사업 중 **우수사업**을 **선정**(54개소, 3월)**하여 지원**(개소당 50백만원)

○ 고용노동부와 협력,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지원

* MOU체결('10.10), 모델발굴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중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어촌 변화의 **선도적 중심체로 육성**

○ 소득창출 등 **공동체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방안 마련**(1월)

- 사업 다각화 및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한 사업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집중 육성('11 : 5개소 → '15 : 25)

○ 자율 희망 교육 실천으로 **소수 정예인력 육성**(공동체당 3~5명)

- 성공모델 공동체를 통한 **국내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1월), **교육 바우처제** 도입(3월)

5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

◇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 농어가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별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행체계 개선

❑ 농어가 지원은 유형에 따라 **산업적 지원**과 **복지 지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 농어가 경영체의 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전환

- **대규모 농가** : 보조지원 단계적 폐지 및 장기저리 융자
- **소규모 농가** : 직접 지불금 및 복지지원 확대

* 복지 지원 : 저소득자 중심,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에 **투자 확대**

○ 성장동력, 위험관리, R&D, 비즈니스 모델개발 분야 등

❑ **농가소득안정직불 도상연습**을 거쳐 예상 문제점 보완

○ 농가소득안정직불 2차 도상연습 실시(5~10월)

* 도상연습 대상지역·품목 확대 : ('10) 9개소, 9개 품목 → ('11) 18, 18

❑ 정책자금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관리체계 개선**

○ **농수산사업 정보시스템**(AgriX)의 기능 확대 및 **개선**

- 수산분야 및 미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타 부처 등의 정보 시스템과 연계체계 강화

○ 농어업경영체의 사업성 평가에 따라 **신용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개선방안 검토**

6 민간투자 활성화

가 농식품 모태펀드 내실화

◇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모태펀드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조합을 10개로 확대('10년 : 5개, '11년 : 5개)

❑ 대출위주의 농업금융시스템에서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비즈니스형 금융지원방식 확대**

○ 중소형규모 농식품경영체 투자를 통한 산업기반 육성과 연관산업간 수직계열화 및 수평조직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5개**를 **추가**로 **결성**하여 다양한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 추진('11 : 500억원)

○ 투자분야는 농림축산업, 수산업, 식품산업, 프로젝트사업으로 구분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출자 비율 및 규모 등 설정

* '11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 수립(1월),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3월),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선정(4월) 및 투자조합 결성(7월)

❑ 농식품분야 투자대상 지속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민간투자 기반을 조성**하여 투자 활성화 도모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로드쇼'**(5월) 및 **'지역 순회 설명회'**(연중) 추진

- 우수 농식품경영체 발굴 및 투자정보 제공, 투자지원 네트워크(D/B) 구축

○ 농식품경영체를 대상으로 투자기획, 재무, 마케팅 등 **사업운영 능력 배양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실시

* 농림수산식품경영체 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 컨텐츠 개발 및 운영

나 새만금 등 간척지 활용 강화

◇ **간척지의 계획적 활용**을 통해 **첨단 선진농업 구현**

○ 새만금 지역은 복합영농단지 및 관광명소로 개발

❑ **간척지를** 수도작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원예, 생명산업 등 **미래농업** 및 **수출전문단지**로 **조성**

○ **미처분 간척지**(34천ha)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과 안정성을 갖춘 **활용방안 마련**(3월)

- 매각, 소규모 단기(5년) 임대 → 대규모 장기(최대 30년) 임대 등 검토

○ 공구별·용도별 면적 배분 등의 절차 및 관리 규정 구체화

*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개정(하반기)

❑ 대규모농어업회사, 유리온실 등 **첨단농업단지 조성 지속 추진**

○ 영산강지구 잔여부지(103ha) 활용을 위한 **대규모농어업회사 사업자 지정**

* 사업설명회(1월), 사업자 평가 및 선정(상반기)

○ **첨단유리온실**은 **시범사업**(화옹지구, '11년 하반기 준공)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조성

❑ 새만금 지역을 **수출형 복합농업단지 및 관광명소**로 조성

○ 시설원예, 축산 등 다원적 활용 용도를 고려하여 방수제, 도로 등 **기반조성 및 내부개발** 추진('11~'20)

○ **방조제 다기능부지**(195ha)는 민간의 창의적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

* 사업협약 체결(3월), 기본·실시계획 수립(하반기)

7 협동조합 선진화

가 농협 사업구조 개편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중앙회 신용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추진

○ '12.3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및 자산실사, 자본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준비

❑ **중앙회 사업 분리** 및 **법인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농협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2월 임시국회)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및 중앙회 정관 등 하위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

* 중앙회는 조합 지원·교육 등을 전담하고, 은행·보험 등 신용사업과 농축산물 판매 등의 경제사업은 각 지주회사가 담당

❑ 법 개정 후 지체없이 **법인 분리 등을 위한 실무 작업 진행**

○ 경제지주, 금융지주 등 법인 설립을 위해 자산실사, 자본금 확충방안 마련, 기존 조직 및 인력 재편계획 수립 등 준비

○ 준비 과정에 농업인 입장이 반영되도록 정부, 농업인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 운영

❑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재정·세제 등 정부 지원 강구**

○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협 자체 조달계획에 기초하여 정부의 부족 자본금 지원계획을 수립('12년 예산안에 반영)

○ 취·등록세 등 사업 분리, 법인 신설에 따른 조세 부담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신설법인 출범 전 완료

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 **"판매중심 농협" 구현**을 목표로 **농협 경제사업 개편** 추진

○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하는 구조 정착

❑ **중앙회**를 **「전국단위 판매조직」**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원예, 양곡, 축산 관련 지원 부서**를 원예판매본부, 양곡판매본부, 축산판매본부 등의 **품목별 사업 체제로 전환**

○ 경제지주 설립('12년) 후 품목별 판매자회사 신설 등 **농축산물 도·소매 유통 기능**을 중앙회에서 **지주회사로 이관**('15년 완료)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 **농협이 적극적 역할 수행**

○ 전국·도 단위 품목마케팅조직 확대,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및 내실화로 **산지 유통의 규모화 촉진**

○ **농가 조직화**를 위해 회원제 공동계산조직을 집중 육성

* '15년까지 조합원 농가가 참여하는 공동계산조직 2천개 육성

○ **농산물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농가 수취가격 안정 도모

- 가격 등락이 심한 무, 배추, 고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농협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중앙회에 **「수급안정 사업단」 운영**

❑ **중앙회 경제부문 조직 개편**과 **향후 투자 계획**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조합,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 및 평가

다 수협 경영정상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 **조기 경영정상화**, 유통·판매사업 중심으로의 **기능 전환**을 통해 수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

❑ 경영정상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 지도·경제사업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회**의 **조직·인력구조 혁신**(5월)

* 지도·경제부문 통합으로 인사·기획 등 공통인력을 공제사업 등에 재배치

○ 부실수협(삼척, 장흥, 전남서부)은 경영목표를 미달성 시 통폐합, 부실우려 수협(39개)은 경영목표를 부여(8월)하여 경영개선 추진

❑ 수협 중심의 **수산물 유통·가공 및 판매 역할 강화**

○ 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수산물 수매물량 확대**

* 수매물량 : ('10) 14만톤 → ('11) 17만톤 → ('12) 20만톤

○ 가공물류센타(인천) 가동률 제고를 통해 수산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산 우수 수산물 대표 브랜드 "바다愛찬" 육성

* 가동률 제고 : ('11) 80% → ('12) 95%

❑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4월)

○ 중앙회 조직을 『**전국 단위 수산물 유통판매 중심**』으로 재편

- 산지 수산물 전국 판매조직망, 소비지 직거래 기반 조성, 중앙회와 조합간 연합 판매 및 구매사업 전개 등

○ 일선수협의 위판장을 『**위생품질관리형 산지시장**』으로 개편

- 조합간 유통체인화를 통한 공동 수산물 판매 및 상품 공급 등

8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 기능·업무 점검을 통한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조직·기능 개편**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

❑ 최근 구제역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농정 관련 조직·인력의 업무 효율성에 대한 비판 제기

○ 28개 유관기관 및 지자체(약 112천명)에서 농식품 분야 정책 기능 수행

* 유관기관 현황(28개 기관, 103,627명) : 외청(농진청·산림청, 3,448명), 소속기관(11개관, 4,188명), 공공기관(9개, 6,879명), 연구기관(3개, 370명), 생산자단체(3개, 88,742명)

* 지자체(8,205명) : 농업기술원(1,324명), 농업기술센터(6,881), 수산사무소(311)

○ 농식품부의 총괄·조정기능 및 소통 미흡으로 유관기관 간 중복·유사업무 추진 등의 문제 발생

❑ **농정기관**의 **조직·업무 점검**을 통한 개선 추진

○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 상황, 잠재적 위험요소 발굴, 조직·인력의 중복 여부 등을 점검(1월)

○ 점검 결과를 토대로 농정 효율화를 위한 중복·유사 기능 개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2월)

❑ 농식품부와 농정기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

○ 개선 방안의 추진을 통해 농정조직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 중점 추진